

IDI연구보고서 2004-08

인천 중소기업의 재생방안

김 번 욱 · 황 중 호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진

- 김번욱 /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황중호 / 지역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

서 문

경제의 서비스化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전통 제조업의 지역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은 향후에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해외이전, 공장 폐업 등 전통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약화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본 조사는 인천지역 소재 중소 제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업종유지·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경영환경 개선방안 - 인력수급, 판로확보(내수 및 수출), 자금지원, 입지환경, 기업서비스 관련 방안 -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하여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재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업종유지 계획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업종전환·공장이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책제언으로 종합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인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관련 연구자, 지역경제정책 입안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지역 내 중소 제조업 위상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를 믿으며, 본 연구를 총괄적으로 수행한 김번욱 연구위원과 참여연구자인 황중호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인천광역시 산업노사지원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 한국산업관리공단 경인본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4. 9.

인천발전연구원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 경제의 서비스化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포함한 선진 각국의 제조업은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인천의 전통 제조업 가운데는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공단 내에는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전통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 해외이전 여부 등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기업재생을 위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조사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비롯한 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주요 연구결과

-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인천기업의 재생방안 연구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이 지역경제 비중 증대, 고용창출 주도, 수출의 안정적 신장예의 기여 등 지역경제발전의 실현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제3장 “인천소재 중소 제조업의 실태분석”에서는 인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내부경영환경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사업전략 등을 파악하였음.
- 또한 기업의 외부환경이라 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입지환경, 지원서비스, 행정기관의 규제정도 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인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반영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방안을 위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음.
- 특히 기업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경영환경 개선방안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음.

- **인력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력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력통계 정비 등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첫째, 인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력통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러한 인력수급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인천지역 대학(예를 들어 재능대학) 내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업체 현장 기술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셋째,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각 전문 분야별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 연수의 확대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넷째,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금 보조금 지원이나 종사자 대상 금융지원은 점차 지양하고,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내수판로확보**를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및 시장정보 제공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중소기업과 다양한 유통경로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전문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 셋째,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별, 테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특히 KOTRA와 무역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출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수출업계의 마케팅 능력 배양, 수출관련 홍보강화,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의 확대 및 활성화 유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술개발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함. 또한 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비즈니스지원, 교육·훈련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이외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컨설팅 활동 강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추진, 그리고 상품화 촉진 지원 자금의 확대 등이 필요함.
 - 둘째, **산·학·연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산·학·연·관의 자연스러운 기술 교류의 장을 통해 필요한 개발과제를 탐색·발굴하고 도출된 개발과제를 바탕으로 협력 파트너 선정 등 수행방법을 사전기획하며, 가장 적합한 협력파트너와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협력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정비가 필요함. 특히 정부의 출연방식도 현재의 자금대여 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대출금리의 인하 및 대출기간의 확대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도 지원대상 사업 분야의 재조정과 다양한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경영컨설팅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신용대출 비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특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야 함.

-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강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칭)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음.
 - 이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중소기업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지역 내 업종별) 중소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기술교류협의회, 지역별 산·학·연·관 협의회, 이업종교류협의회 구성 등을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인천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바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기본적 업무협의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TFT’ 구성은 주관·참여기관 선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아래 하나의 대안으로 인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들 수가 있음. 특히 지원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천시의 직접지원업무의 과감한 이양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표 A-1>은 지금까지 요약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종합한 것임. 각 분야별로 지원정책 집행상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관련기관들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분야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A-1> 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지역 내 활용가능 정책(案)

인력확보 지원방안	내수확대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인력관련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실태조사 등 정비 - 인력 통계 정비 ○ 근로여건 개선 지원강화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확대 - 인사노무관리 관행 개선지원 ○ 교육훈련활성화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교육훈련 컨소시엄 개선 ○ 현장연수 확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수 시스템 구축 - 현장연수 전문 평가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마케팅 계획수립 지원 - 마케팅 전문가 양성 위한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 구축 - 제품별·테마별 전시회 기획·운영 - 제품전시장 확대 및 운영개선 ○ 판로확대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 - 공동판매지원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제품인지도(경쟁력) 확보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지원 확대 - 동업종간 공동브랜드 개발 - 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수출확대 지원방안	기술개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지원자금 확충 -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정책 신설 - 해외 마케팅 지원인력 육성 - 해외현지지원 거점 확충 - 해외무역사무소 기능 및 역할 확대 ○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강화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 무역금융 배정비율 상향 조정 - 수출선도기업 대상 금융보험 지원확대 ○ 시장정보 제공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및 시장정보 확대제공 - 해외제휴 협력업체 알선 ○ 수출 선도기업 집중 육성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품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육성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 신기술 기반 창업추진 ○ 자금지원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 제도개선 - 상품화 추진 지원자금 확대 (직접지원→간접지원) ○ 산·학·연 협력 체제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축지원 -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확보지원 - 경영기술지원단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종간 통합 브랜드 개발지원 - 시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조달 지원방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재정비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확대 -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산업분야 재조정 ○ 대출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차등금리 적용 - 대출절차 간소화 ○ 자금지원정보 접근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홍보 확대 ○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화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 기능 확충 (인천신용보증재단 역할 확대) - 평가가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차원 중소기업청 주축) (단기적으로는 지역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의 네트워크화 - 종합정보제공센터 역할 수행 - 지역혁신 지원기관 실태 조사 - 지역혁신 지원기관 보유 장비 및 지원능력 조사 ○ 지역별 중소기업 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 (1순위) ○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2순위)

■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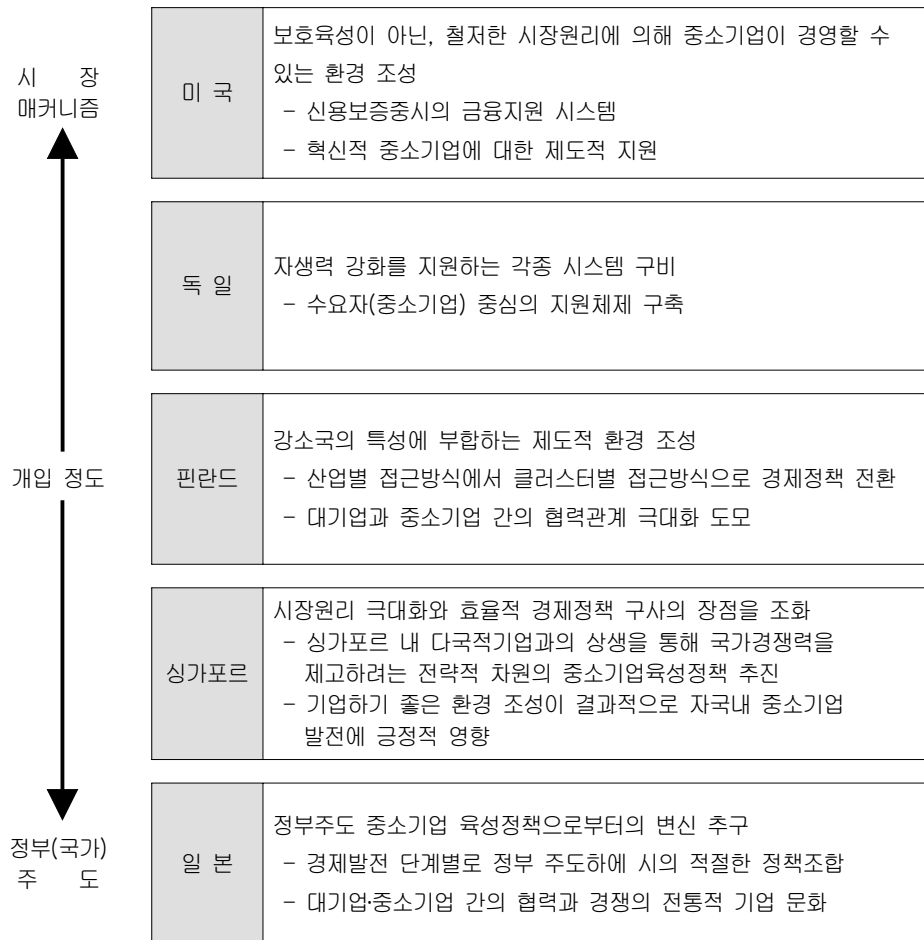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전환

-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 본 재생방안들은 지원 예산 등 정책 적용상 한계나 효율성 측면에서 비현실적·비효율적 방안들이 상당 부문 존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임금보조금·수출보조금 지원 확대 등은 예산 한계는 물론 해당 업체의 장기적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종래의 직접적 지원 방식(특히 경영안정자금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특히 컨설팅,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인력양성 및 교육체계 강화 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림 A-1>에서 나타난 선진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즉, 보호육성이 아닌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미국),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독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극대화 도모(핀란드)사례는 물론,
 - 정부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의 변신 추구(일본) 방안들은 인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전환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음.

□ 업종유지 계획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제조업체중 67.2%가 업종유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최근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증가 추세와 특히, 남동공단

내의 전통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A-1> 선진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2004. 6.

-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적지 않은 ‘업종유지’ 계획업체들이 기업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보, 기술개발 지원’등의 측면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 업종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함.

- 특별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자체개발도 있으나, 중소기업의 여건상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원청업체와의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외부기관 또는 업체와의 공동협력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생산비용절감, 판매시장확보, 종업원 교육강화가 특히 업종유지 계획업체에게 요구되고 있음.

□ 업종전환 · 공장이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 또한 ‘업종전환, 공장이전’업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업종전환 비중이 전체 제조업체수의 7.8%, 공장이전 비중이 14.9%나 각각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내수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기술경쟁력 약화, 업종사양화’ 등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업종전환, 공장이전’ 업체 비중이 확대되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반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내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의 재생을 위한 대책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물론 장기적 유지 전망이 불투명한 일부 사양산업을 제외하고 ‘판매시장 확보 지원 및 가격 · 기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들 업체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내지는 ‘신산업과의 연계 · 육성’을 가능케 하여야 함.
- 또한 ‘공장이전’ - 특히 중국이전 - 업체들은 특히 ‘인건비 등 비용절감, 현지판매시장 개척, 소비시장 접근성’ 등의 이전요인을 감안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특히 관련 해외정보제공을 통한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 이러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중복업무 분석 및 효율성 재평가 작업에 기초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방안이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종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인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도 대안으로 가능할 것임.
- 이러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중소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 내 성장·고용을 제고시키는 중소 제조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표 A-1>에 요약된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음.
 - 이는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관련기관들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역량에 따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실무 집행기관의 역량 여건을 고려한 자체적인 우선순위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업종유지 계획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방안, 업종전환·공장이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세부적·우선순위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목 차 -

요약 및 정책제언	I
제1장 서론 : 본 연구의 의의	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분석 틀, 연구범위 및 구성	10
제2장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인천 중소기업의 역할	15
제1절 인천지역 제조업의 발전 현황	15
제2절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규모별 · 업종별 변화	20
제3절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역할	29
제3장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실태분석	37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37
제2절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실태	41
제3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상 문제점	55
제4절 기업의 향후 경영전략	68
제4장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재생방안	81
제1절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기본방향	81
제2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방안	85
제3절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강화 방안	116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25

- 표 목 차 -

<표 2-1> 인천市 주요업종의 비중 변화	18
<표 2-2> 인천 제조업의 전국 대비 업종별 비중 현황	20
<표 2-3> 인천지역 제조업의 규모별 비중 추이	20
<표 2-4> 인천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변화 추이	22
<표 2-5>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업종별 비중 변화 추이	23
<표 2-6>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인원 구성비 현황	26
<표 2-7> 인천중소기업의 산업별 분포	31
<표 2-8> 인천지역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추이(1)	32
<표 2-9> 인천지역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추이(2)	33
<표 2-10> 인천지역 수출현황	34
<표 3-1> 협조기관 업무분장 현황	39
<표 3-2> 업종별 매출액 구성 현황	43
<표 3-3> 생산유형별 업종 구성	46
<표 3-4> 업종별 최근 3년간 가동률 추이	49
<표 3-5> 업종별 수출 및 내수 비중 현황	51
<표 3-6> 업종별 수출시장 현황	53
<표 3-7> 업종별 향후 경영전략	69
<표 3-8> 매출액 규모별 향후 경영전략	70
<표 3-9> 향후 경영전략과 생산형태	71
<표 4-1>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정책 비교	91
<표 4-2>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정책 비교	98
<표 4-3>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비교	107
<표 4-4>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정책 비교	111
<표 4-5>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세부사업 내용	120
<표 4-6> 7대 주요 도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 및 중소기업체 현황	120
<표 5-1> 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지역 내 활용 가능 정책(案)	130

- 그 립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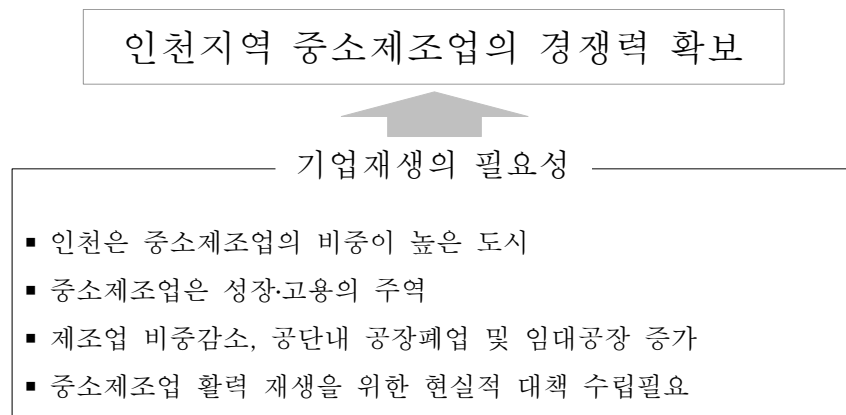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그림 1-2> 국내 제조업의 위기 상황	8
<그림 1-3> 연구의 내용 및 틀	11
<그림 2-1> 인천·전국의 2차 산업 비중 비교	16
<그림 2-2> 인천 제조업의 전국비중 추이	16
<그림 2-3> 인천지역 제조업 비중 추이	18
<그림 2-4> 인천지역 10대 주요 업종 구성 변화	19
<그림 2-5>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변화 추이	24
<그림 2-6>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 추이	25
<그림 2-7>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생산액 비중 변화 추이	26
<그림 2-8> 인천지역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7
<그림 2-9> 인천지역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	28
<그림 2-10>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29
<그림 2-11>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황	30
<그림 2-12>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	31
<그림 2-13> 인천지역 중소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	33
<그림 2-14>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34
<그림 3-1> 업종별 현황	41
<그림 3-2> 매출액별 현황	42
<그림 3-3> 종사자 규모별 현황	44
<그림 3-4> 기업환경의 전반적 애로사항	56
<그림 3-5> 인력확보 어려움의 주요 원인	58
<그림 3-6> 제품판매 어려움의 주요 원인	59
<그림 3-7> 수출 어려움의 주요 원인	60
<그림 3-8>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	61
<그림 3-9> 자금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	62
<그림 3-10> 물류절감 용이성 여부	64
<그림 3-11> 시장 개척 정보획득 용이성 여부	66
<그림 3-12> 입주관련 서비스 용이성 여부	66

<그림 3-13> 생산서비스 인프라 용이성 여부	67
<그림 3-14> 일반 행정지원서비스 우수 여부	68
<그림 3-15> 업종유지업체의 업종별 구성	71
<그림 3-16> 업종유지업체의 주요 애로요인	72
<그림 3-17> 업종전환업체의 업종별 구성	73
<그림 3-18> 업종전환의 주요 원인	73
<그림 3-19> 공장이전업체의 업종별 구성	75
<그림 4-1>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목표	82
<그림 4-2>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기본방향	83
<그림 4-3>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의 주요 역할	86
<그림 4-4>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87
<그림 4-5> 제품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92
<그림 4-6>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95
<그림 4-7> 기술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	100
<그림 4-8> 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101
<그림 4-9> 산·학·관 협력방안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	106
<그림 4-10>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108
<그림 4-11> 입지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112
<그림 4-12> 기업컨설팅 서비스 필요성 여부	114
<그림 4-13> 환경규제 정도여부	115
<그림 4-14> 지원기관 이용 시 어려움의 주요 원인	117
<그림 5-1> 선진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	132
[참고문헌]	137
[부 록] 인천지역 기업의 재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표	141

제 1 장 본 연구의 의의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1) 전통 제조업의 역할 부활론

최근의 경제 환경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게는 갈수록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물질적인 재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환경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생산성 증가율과 IT 산업의 침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걷히면서 전통 제조업에 대한 강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은 -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경우 -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폭넓은 고용제공을 통한 낮은 실업률 유지는 제

조업의 최대 장점이 되고 있으며, 일례로 통일 후 독일¹⁾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제조업 경제에서의 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4%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조업 기술의 진보가 단순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는 속설에 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조업의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낮은 실업율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이외에도 제조업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제조업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민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반하여, 탈공업화 경제의 대표 격인 미국과 영국은 만성적인 경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선전과 실적 개선이 일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의 장기불황 속에서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술경쟁력 향상, 원가절감 등의 체질강화가 실적 개선으로 가시화되었으며, 또한 주력 제조업의 수출(특히 아시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과 이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제고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 제조업의 부활 사례는 국내 제조업계에 대하여 경쟁력 격차 등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구조조정 및 재생의 성공비결 체득, 산·학·관 협력, 공격적 대응 등의 국내 제조업 부활 가능성을 높여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전통 제조업의 지역적 중요성

인천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통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의 물류산업 육성과 송도신도시를 중심

1) 독일 경제가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한 것은 아니고, 통독 이후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현상이다.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구 서독지역의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으로 하는 국제 비즈니스 중심거점화 추진 과정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경제는 탈공업화·소프트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 - 특히 기간주력 제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기계·금속산업 - 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전통 제조업 부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 주력 제조업의 재생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물론 경제의 서비스화가 크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전통 제조업만으로 산업재생을 달성하는 것은 무리이나, 인천지역의 경우 전통 제조업을 도외시킨 산업재생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재생의 핵심 일환으로서의 기업재생

이러한 산업재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산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재생’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앙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시(市)단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기업 재생을 위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 제조기업들은 최근 불황이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인한 사업실적 악화와 제조 공동화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R&D 투자 확대, 고급 기술인력 우대, 산·학·연 연계 강화 및 선진기업 유치에 의한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한국, 중국 등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의 개발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철저한 원가 절감을 통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뒤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특히 마쓰시타冷機의 경우 생산혁신을 통해 리드타임을 70% 감소시켰으며 인원 40% 축소, 라인길이 65% 단축, 15분간만의 재고 보유 등의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셋째, 기업간,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첨단산업의 복합적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형성²⁾이다. 대량 생산만으로는 중

국에 이길 수 없게 되자 일본기업들은 폭넓은 기술기반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간 종적연계에서 이종간,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횡적연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의 경우에도 기업재생을 위한 중심 방향을 지역기업의 대부분(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력재생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활성화, 종합적 창업지원, 벤처기업 지원, 경영혁신 지원, 정보화 지원 및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 육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중소기업 역할의 증대

이러한 기업재생을 함에 있어, 인천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생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의 소프트화 과정에서 기술발전의 가속화, 유연생산체제의 확산으로 기업의 최소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조직보다는 중소 규모의 조직이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지역 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액과 부가가치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수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부품 및 소재, 중간기술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³⁾.

또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전문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틈새시장을 담당하는 데에 있다. 오늘날의 시장은 주문화(Customization) 및 다양화(Variety)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새로운 전문적 제품을 위한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중소기업이 틈새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도·소매 유통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제조관

2) 일본정부(文部科學省)는 일본 전국에 15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각 지역에 5억 엔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2장 중소기업의 역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런 서비스업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조직의 강점요소 결부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능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지역 내 실업해소 및 사회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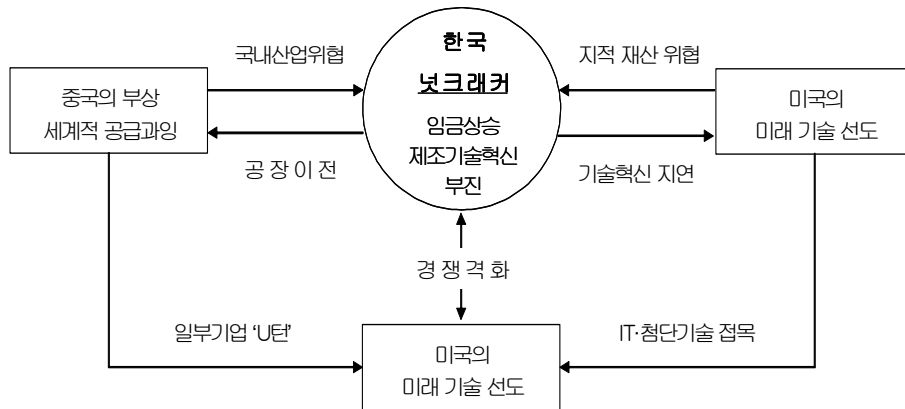
이는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으로서는 역내 중소기업의 재생, 특히 경쟁력 제고방안이 인천광역시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쟁력상 문제점

(1) 무한 경쟁에 따른 구조적 악순환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외적으로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적 조류와 함께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장기적인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설비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위축 등 구조적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제조업의 공급과잉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제조기술 기반의 원가절감 경쟁이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후발 공업국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위기에 처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국내 제조업의 위기 상황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제조기술 기반의 원가경쟁력 강화방안”, 「CEO Information」, 2003.

(2)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중소 제조업 공동화 현상

특히, 인천의 전통 제조업 가운데는 산업구조의 전환(경제의 서비스화),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중국으로의 이전 등의 영향을 받은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경우)가 많아, 남동공단 내에는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전통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제조업의 공동화’⁴⁾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 강구⁵⁾가 필요하다.

즉, 인천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

- 4) 주요 선진국 등에서는 제조업의 공동화가 공업화를 이루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시점에서 임금이나 각종 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가격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후발 공업국들의 추격을 받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국내투자 침체, 공장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기업도태, 실업확대, 국제수지 악화, 환율의 평가절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및 고도화로 이어졌다(이지평,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전략, LG 주간경제. 2002. 5. 15. 6쪽 참조).
- 5)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동화가 가장 심한 신발 등 경공업 분야의 경우 공동화 비중이 매우 높고 전가전자자동차의 경우에도 공동화 비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가전자 등 조립 가공산업의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공동화 압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 압력은 보다 성숙된 경제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시험대로 볼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가 해당 산업의 관련 기술의 공동화와 기술혁신 능력 약화에 따른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에 이어져서는 안된다. 즉,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신산업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 차원에서도 이뤄져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가 촉진되고, 이로써 여러 관련 산업의 기술혁신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전계서, 9쪽 참조).

비해 높아서 제조업 공동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나, 향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동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천기업의 중국진출 등 중국과의 교류 증대 등으로 인천의 기존 비교우위 분야가 약화됨과 동시에 인천 제조업의 공동화 압력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지역으로서는 기존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필요성, 송도신도시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급변하는 내·외 여건 가운데, 전통 제조업 - 특히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⁶⁾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 관련 기초 연구의 전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 해외이전 여부 등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태 분석 등 기업재생을 위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수행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 조사 역시 입주업체에 대한 단순 개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투자국 등).

따라서 입주기업의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 분석에 따른 기업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며, 특히 이전이나 폐업 가능성이 높은 금형, 프레스, 도금 등 3D업종의 경우 IT기술접목을 통한 재생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포함한 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

6) 여기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지방정부마다 육성코자하는 첨단산업에 의한 전통제조업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고, 창업 주도지원, 업종별 주도지원,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개발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하여, 산업의 연속성을 갖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 인천지역에 활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틀, 연구범위 및 구성,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인천기업의 재생방안 연구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제2장에서는 인천지역 내 제조업의 일반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기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역할 부문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용측면, 생산측면, 수출측면 등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제3장 “인천소재 중소 제조업의 실태분석”에서는 인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내부경영환경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사업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외부환경이라 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입지환경, 지원서비스, 행정기관의 규제정도 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인 중소기업 재생방안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인천소재 중앙부처 관련 지원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는 지원정책중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방안들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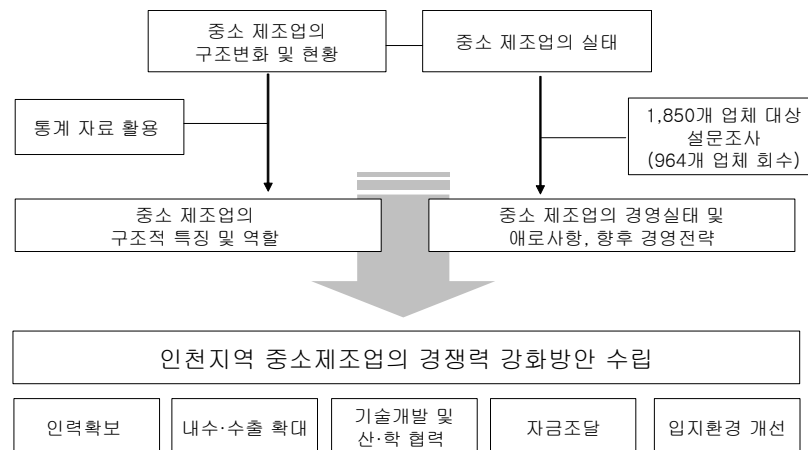
7)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특히 송도신도시)과 연계하여 기술집약적이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나, 1차적으로는 기존 전통 주력제조업의 재생에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비전제시와 정책제언은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과 경영환경 개선방안 - 특히 인력수급, 내수/수출 확보, 자금조달, 입지환경 -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활용과 함께, 인천광역시나 군·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출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제 반 정책들을 동시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국내외 중소기업제도 관련자료, 법령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관한 이론과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내용을 향후 중소기업의 재생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반영하였다.



⇒ 중앙정부의 법·제도 지원정책 활용 기본. 인천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 추가

<그림 1-3> 연구의 내용 및 틀

제 2 장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인천중소기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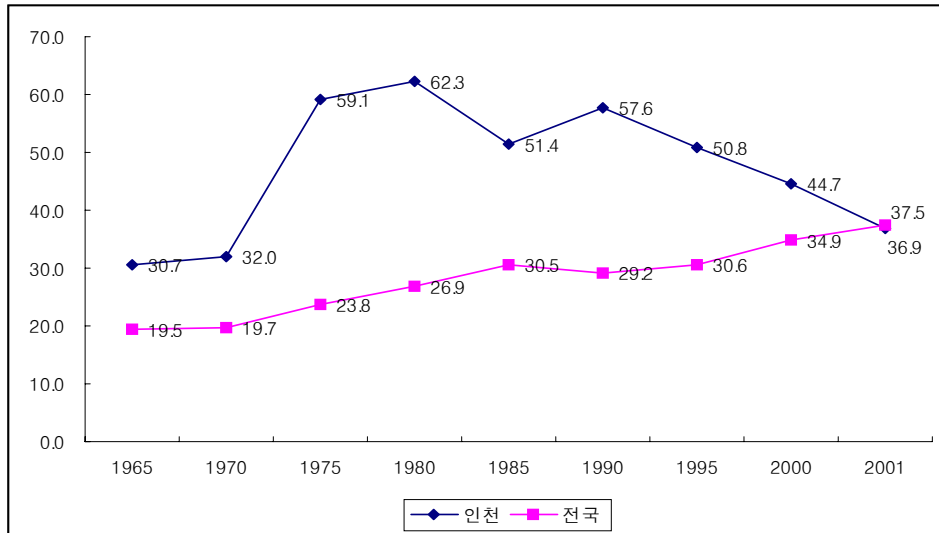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인천지역 내 제조업의 일반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제조업의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기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역할 부문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용측면, 생산측면, 수출측면 등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인천지역 제조업의 발전현황

1. 인천지역 제조업의 역할

인천지역 제조업은 지역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구조를 볼 때 인천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임을 알 수 있는데, 1980년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62.3%에 이르러 공업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1년에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36.9%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 7대 광역시중 울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8) 참고로 7대 광역시의 제조업 평균 비중은 23.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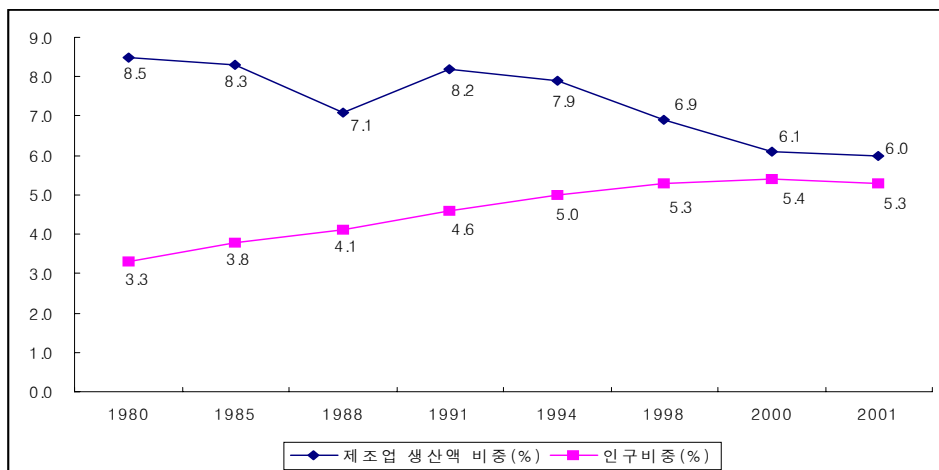


<그림 2-1> 인천·전국의 2차 산업 비중 비교

주 : 단위 %, 생산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2.

따라서 인천의 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 최고치인 8.3%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인구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나, 인천이 제조업 중심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인천 제조업의 전국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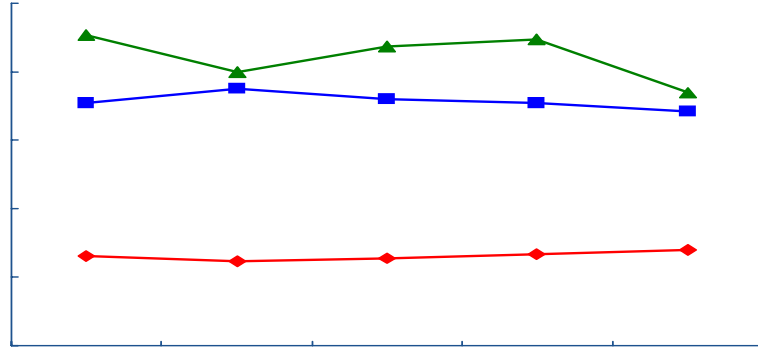
2. 인천지역 제조업 공동화 추세 여부

산업 공동화현상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생산비중·고용비중’ 측면에서 인천지역 제조업의 경우 1997년도 이래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2-3> 참조) 또한 인천지역 노동 생산성 역시 1997년 6천 2백여만 원에서 2000년 5천 8백만 원으로 하락⁹⁾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비중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생산액 및 사업체수는 동기간 증가하여 제조업은 인천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비중 및 노동생산성의 감소는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라기보다는 「산업의 서비스화」 과정의 자연적 추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 - 특히, 산업의 구조고도화(고부가가치 첨단제조업으로의 이동) -을 고려한 지원정책¹⁰⁾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9) 2001년에는 6천 2백여만 원으로 재상승 하였으나, 이는 2000년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고용자수 감소폭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10) 지역 내 기업차원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인식하여 미리 대응하여야 한다. 즉, 제조업 공동화는 부분적 생산 및 소득감소, 개량형 기술혁신 저해,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 산업의 고도화(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제조업으로 경제적 차원의 이동), 돌파형 기술혁신 촉진(신개념의 새로운 기술혁신에 유리), 소비자 후생확대(소비자 이익 증진 가능), 개도권 분업확대(개도권과 제품수입, 고부가가치 수출구조 형성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G 경제연구원, 「제조업공동화와 기업전략」, CEO Report, 2002. 5.15.).



<그림 2-3> 인천지역 제조업 비중 추이(1997~2001) (단위 : %)

3. 인천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변화 : 전통제조업의 쇠퇴

그동안 인천 제조업을 이끌어 왔던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 기계, 철강,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이다. 80년대 초 주력 업종이었던 식료품, 섬유는 그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의 경우 비중이 1981년 25.1%에서 2001년에는 37.5%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표 2-1> 참조). 단, 자동차 업종의 경우 대우자동차 사태 여파로 최근 비중이 감소해 1991년 13.3%에서 2001년 9.8%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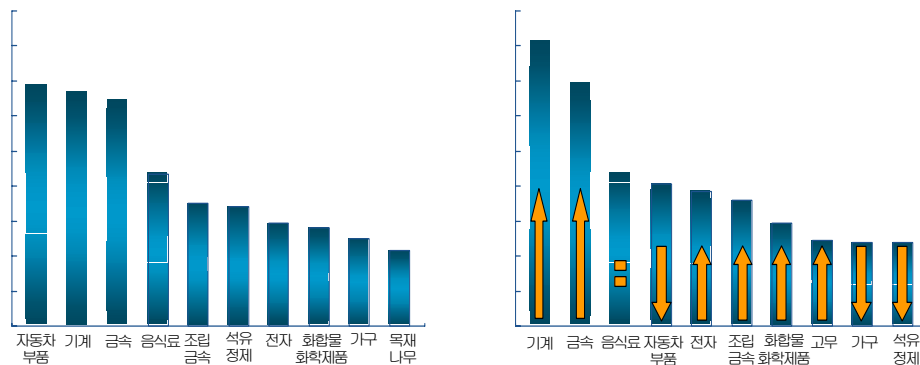
<표 2-1> 인천市 주요업종의 비중 변화

(단위 : %, 생산액기준)

	석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목재 가구	식료품	섬유
1981년	21.4	25.1			13.0	9.4	14.4	10.9
1991년	12.4	13.7	8.8	13.3	13.7	13.0	10.1	4.4
2001년	19.6	14.8	12.9	9.8	12.9	8.9	7.8	3.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판.

1999~2002년간 인천 주요 업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 제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업이 주요 업종에 속하며, 2002년부터 전자부품·영상·음향이 새롭게 5대 주요 업종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10대 주요 업종의 구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비중 하락업종 중 자동차 부품의 경우 1999년에 비해 5.7%p 감소한 8.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이 각각 0.2%p, 2.0%p 감소하였다. 고무·플라스틱 업종의 2002년 새롭게 10대 주요 업종에 포함되었으며 비중은 4.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4> 인천지역 10개 주요 업종 구성변화 (단위 : %)

이들 10대 주요 업종이 인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2.1%로 1999년 83.2%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4> 참조). 특히 기계·금속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비중 면에서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IT산업, 물류산업과 함께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근거하여 4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의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목재·나무제품제조업(37.8%)과 가구 및 기타제조업(21.5%)이 매우 높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2.8%), 조립금속제품(12.0%), 제1차금속제조업(9.1%) 등도 평균(7.4%)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인천 제조업의 전국 대비 업종별 비중 현황(2002년 기준)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제조업 계	8.69	7.68	5.75	5.41
음식료품	3.32	3.85	7.38	7.07
섬유제품	2.21	2.08	1.97	2.04
의복 및 모피제품	2.62	3.97	2.86	2.96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3.21	2.58	4.20	4.30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24.75	35.11	40.59	37.8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5.77	3.75	2.15	1.9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1.72	1.53	1.08	1.14
코크스,석유정제 및 핵연료	9.17	6.70	4.97	2.09
화학물 및 화학제품	7.85	6.03	3.51	3.8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71	7.37	6.60	6.43
비금속광물제품	4.46	4.46	4.19	3.83
제1차금속	13.72	10.92	10.14	9.0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외)	15.72	13.16	11.10	12.04
기타기계 및 장비	12.54	12.78	12.01	12.8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8.83	4.13	1.58	1.46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9.53	7.28	6.27	6.64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14.80	6.95	3.12	2.71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7.24	7.48	8.26	7.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8.46	9.75	4.17	2.82
기타운송장비	6.56	1.12	0.49	0.57
가구 및 기타	12.94	19.09	17.99	21.49
재생재료가공처리	9.22	13.17	18.51	12.36

자료 : 통계청, 통계DB(KOSIS)에서 제작성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료품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등 생활 소재형업종과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업 등 해외원료 의존형 업종들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제 2 절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규모별·업종별 변화

1. 중소 제조업의 규모별 변화

1997~2002년 기간에는 인천경제가 침체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5~1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2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변화추이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종업원수 5~19인의 소기업에서 신규창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표 2-3> 인천지역 제조업의 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

구 분	1997년				200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5~9	3,555 (46.1)	23 (11.3)	1,431 (4.7)	672 (5.8)	4,817 (50.3)	30 (14.7)	2,734 (7.5)	1,134 (8.7)
10~19	2,099 (27.2)	28 (13.7)	2,453 (8.0)	1,054 (9.1)	2,576 (26.9)	34 (16.6)	3,751 (10.3)	1,488 (11.4)
20~49	1,401 (18.2)	42 (20.6)	4,781 (15.6)	2,024 (17.5)	1,550 (16.2)	46 (22.5)	6,388 (17.5)	2,494 (19.0)
50~99	394 (5.1)	26 (12.7)	3,734 (12.2)	1,503 (13.0)	392 (4.1)	26 (13.0)	5,260 (14.4)	2,063 (15.7)
100~199	174 (2.3)	26 (12.7)	4,215 (13.8)	1,759 (15.2)	184 (1.9)	25 (12.1)	5,591 (15.3)	2,147 (16.4)
200~299	26 (0.3)	7 (3.4)	1,725 (5.6)	707 (6.1)	29 (0.3)	6 (3.3)	1,600 (4.4)	709 (5.4)
중소기업 계	7,649 (99.1)	152 (74.5)	18,339 (60.0)	7,719 (66.7)	9,548 (99.6)	167 (82.2)	25,324 (69.5)	10,035 (76.5)
300~499	37 (0.5)	13 (19.1)	2,375 (7.8)	910 (7.9)	18 (0.2)	6 (3.3)	2,216 (6.1)	734 (5.6)
500 이상	34 (0.4)	39 (25.5)	9,872 (32.3)	2,943 (25.4)	20 (0.2)	29 (14.5)	8,920 (24.5)	2,340 (17.8)
대기업 계	70 (0.9)	52 (25.5)	12,247 (40.0)	3,853 (33.3)	38 (0.4)	35 (17.8)	11,136 (30.5)	3,074 (23.5)
제조업 전체	7,719 (100.0)	204 (100.0)	30,590 (100.0)	11,575 (100.0)	9,586 (100.0)	207 (100.0)	36,463 (100.0)	13,112 (100.0)

주 : ()안의 수치는 제조업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통계DB(KOSIS)에서 재작성

2.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변화

1997~2002년 기간 중 제조업 전체로 볼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증가한 반면, 기술·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오히려 4.6% 감소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인천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변화추이 (부가가치기준)

(단위 : 10억 원, %)

구 분		1997	2002
전 국	경 공 업 소계	47,385 (26.2)	55,552 (23.1)
	중소기업	31,313 (17.3)	43,074 (17.9)
	중화학공업 소계	133,700 (73.8)	185,278 (76.9)
	중소기업	52,834 (29.2)	81,502 (33.8)
인 천	경 공 업 소계	3,192 (23.7)	3,701 (28.3)
	중소기업	2,167 (16.1)	3,082 (23.6)
	중화학공업 소계	10,276 (76.3)	9,367 (71.7)
	중소기업	5,047 (37.5)	6,911 (52.9)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판.

하지만 중소 제조업만을 살펴보면, 기술·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7년 대비 15.4%의 증가를 보였으며, 노동집약 산업인 경공업에서도 1997년 대비 7.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중화학공업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수치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소제조업의 업종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공업의 경우 음식료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1.07%, 1.84%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목재 및 나무제품의 경우 1997년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공업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3.29%),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 기계·장비제조업이 1997년 대비 각각 1.74%, 1.08% 감소하여 중공업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표 2-5>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변화 추이(부가가치기준)

(단위: %)

구 분	업 종	1997(A)	2002(B)	B-A
경 공 업	음식료품	9.38%	10.45%	1.07%
	담배	0.04%	0.04%	0.00%
	섬유제품	2.15%	1.86%	-0.30%
	봉제의복 및 모피	1.16%	1.34%	0.18%
	가죽,가방,신발	0.51%	0.30%	-0.21%
	목재 및 나무제품	4.72%	3.35%	-1.38%
	인쇄출판, 기록매체복사	0.53%	0.80%	0.27%
	고무,플라스틱	5.15%	7.00%	1.84%
	가구 및 기타제품	6.40%	5.77%	-0.63%
	재생용 가공원료	0.28%	0.38%	0.10%
	소 계	30.33%	31.27%	0.94%
중 공 업	코크스,석유정제품	0.45%	0.45%	0.00%
	화합물,화학제품	7.42%	8.11%	0.69%
	비금속광물제품	4.08%	3.73%	-0.35%
	제1차금속	6.02%	5.07%	-0.94%
	조립금속제품	11.12%	11.12%	0.0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18.77%	17.69%	-1.0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76%	0.86%	-0.90%
	기타 전기기계	4.83%	5.42%	0.5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57%	8.86%	3.2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71%	1.77%	0.06%
	자동차,트레일러	5.84%	4.10%	-1.74%
	기타 운송장비	0.72%	0.53%	-0.19%
	펄프,종이,종이제품	1.39%	1.03%	-0.36%
	소 계	69.67%	68.73%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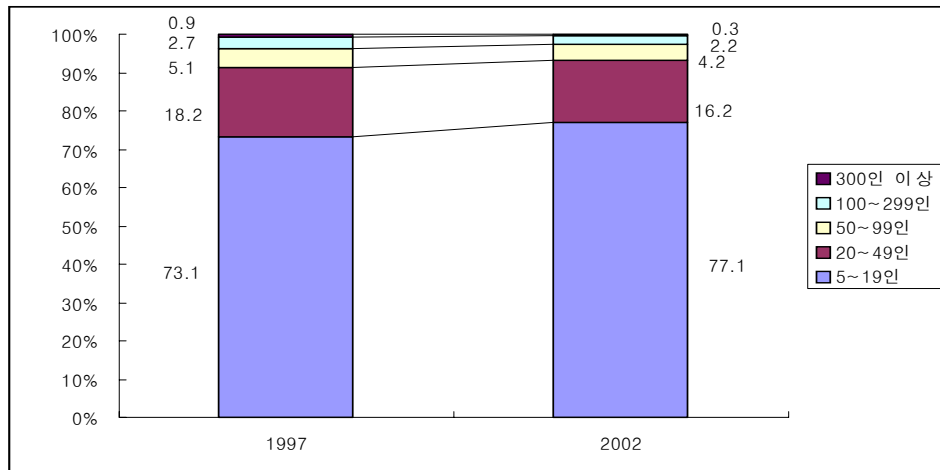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판.

3. 중소기업 세부 구조변화

1) 사업체수

우선 중소기업의 규모별 변화추이를 사업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말 현재 제조업 총 사업체수 21,098개 중 종사자 5인 이상 299인 이

하 제조업 중소기업체수는 9,548개로 1997년 대비 2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체의 경우 45.7%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변화추이(단위 :%)

1997년~2002년의 기간동안 중소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종사자 5~19인(30.6%), 20~49인(10.3%) 및 100~299인(2.4%)의 경우 각각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Δ 45.7%)과 50~99인(Δ 0.3%)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규모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5~9인 규모의 영세기업에서는 사업체수의 비중이 4%의 증가를 보인 반면, 2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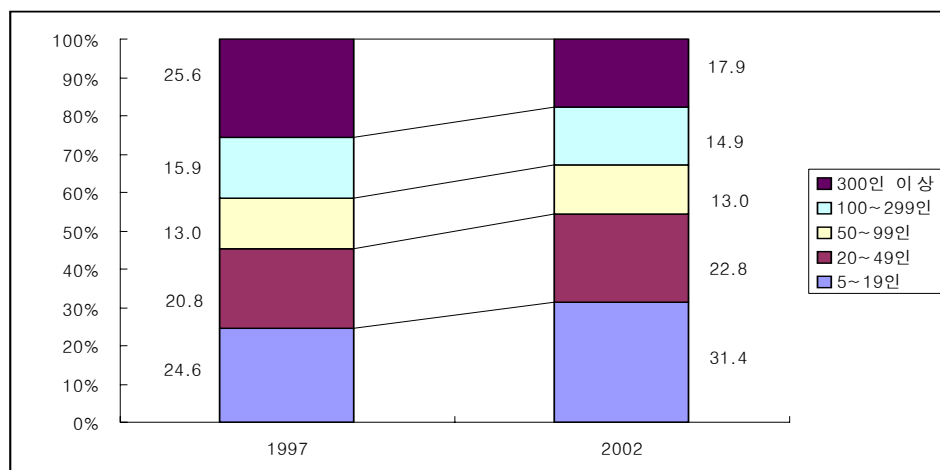
2) 종사자수

한편 중소기업의 규모별 변화추이를 종사자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기한 사업체 수 비중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총 종사자수는 723,081명으로 1997년과 비교하여 12.6% 증가했으며, 이중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종사자수는 207,746명으로 1997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경우는 21.6명으로 1999년의 26.9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규모별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종업원 5~19인의 경우 27.5%, 20~49인은 9.3% 증가하였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수 비중 면에서는 5~19인의 영세 중소기업체의 경우 약 7%의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20인 이상 299미만의 중소기업체의 경우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체의 경우 약 8%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추이(단위 : %)

한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인 구조 전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준전문가의 구성비면에서 전국 평균

인 12.80%에 비해 낮은 9.57%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7대 광역시 중에도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2-6> 참조).

<표 2-6>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원 구성비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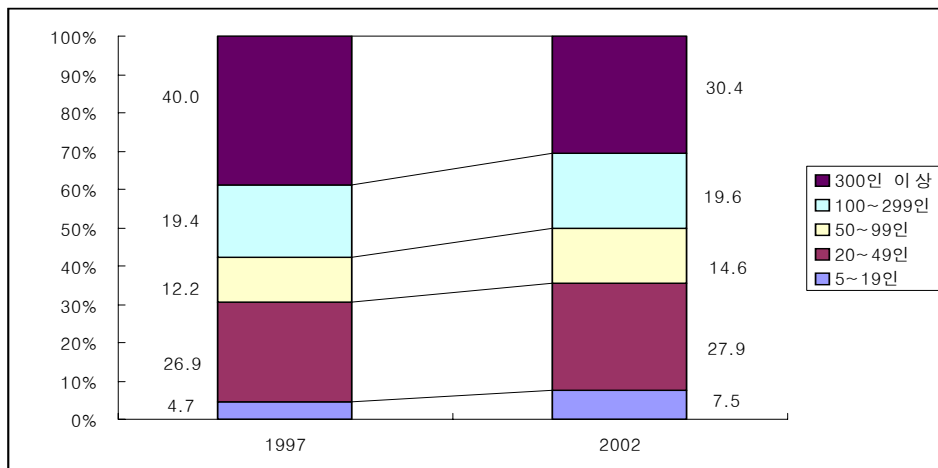
	사무 관리직	기술 전문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전국	20.93	12.80	29.02	32.35	0.99	3.92
서울	28.08	16.80	22.66	22.77	1.03	8.67
부산	19.73	12.25	32.48	31.50	1.25	2.78
대구	19.72	14.33	37.91	24.94	0.54	2.57
인천	19.68	9.57	41.81	25.23	0.98	2.72
광주	18.99	11.17	29.54	37.46	0.71	2.13
대전	19.39	18.82	23.71	29.91	1.06	7.12
울산	18.18	10.75	36.00	33.33	0.53	1.22

자료 : 중소기업청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2003.

3) 생산성의 변화

(1) 생산액 변화

2002년 말 현재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의 생산액은 36조 6,594억원으로 1999년과 비교해 19.8%인 약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인천지역 중소기업 규모별 생산액 비중 변화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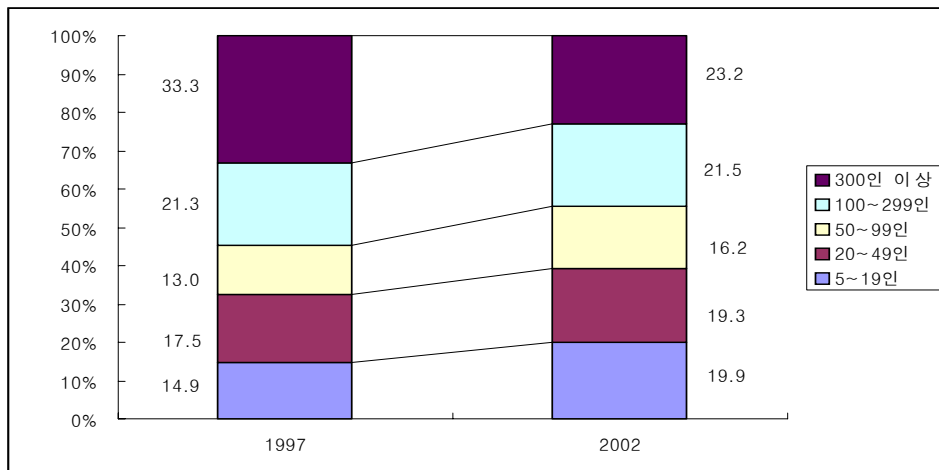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생산액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대비 약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가가치 변화

2002년 12월말 현재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의 부가가치는 13조 2,730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14.7%p(약 1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부가가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23.2%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999년과 비교해서는 약 10%p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체의 경우 비중 면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5~19인의 영세 중소기업체가 가장 높은 5%p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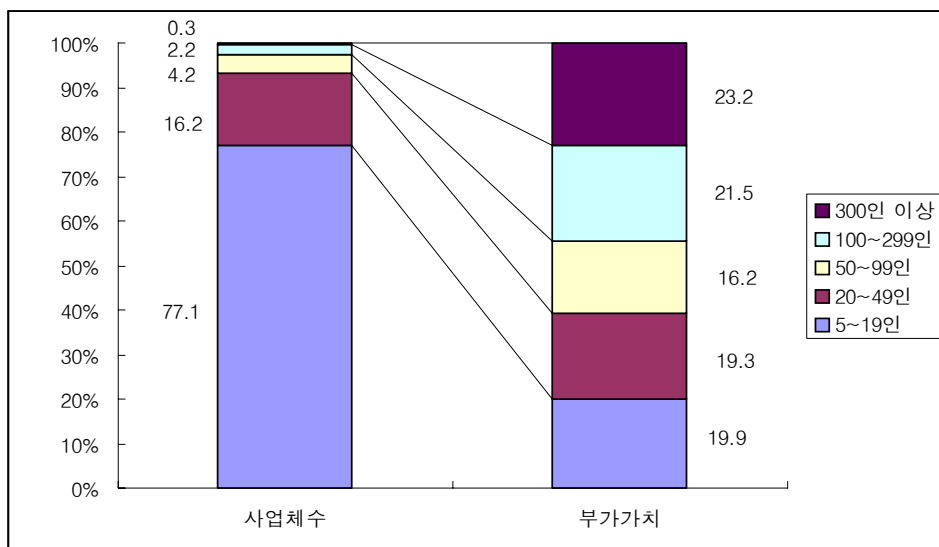


<그림 2-8> 인천지역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추이(단위 :%)

그러나 주의할 점은 비중이 증가한 종업원 19인 이하의 영세기업은 경쟁력구조에 직면하여 영업활동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과당경쟁구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대로 2002년 말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체수가 9,548개로 성장하였지만, 전체 사업체의 50.3%를 차지하는 종업원 5~9인 중소기업체의 부가가치 비중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9> 참조). 이에 반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0.3%의 비중에도 불과하나 출하액 비중면에서는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 구조 하에서 영세 소기업과 중·대기업이 동일한 영업이익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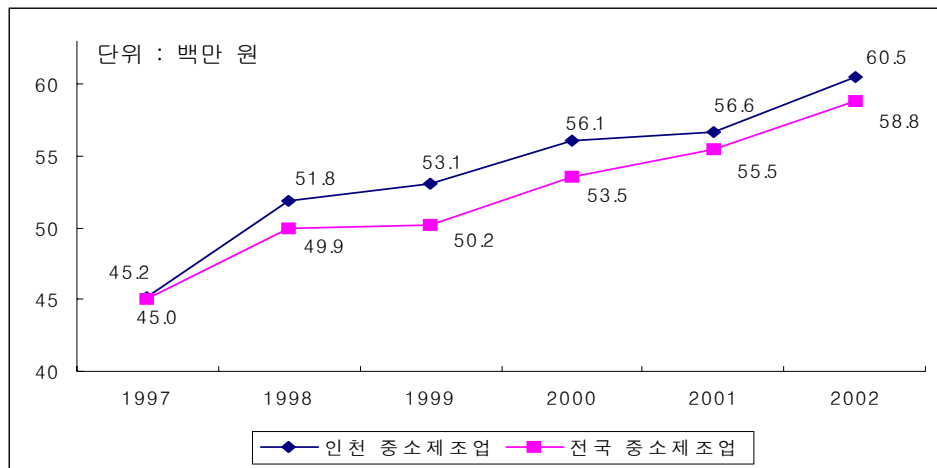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50인 이상의 중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부도가 급증하면서 종업원 수가 감소한 반면, 종업원 19인 이하의 영세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소기업들의 활발한 신규창업이 이뤄졌음을 의미하기는 하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영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2-9> 인천지역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2002년,단위:%)

이 과정에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경우 1997년 4천 5백여만 원에서 2002년 5천 9백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으나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10> 참조). 또한 2002년 인천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대기업 8천 7백여만원의 70.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0>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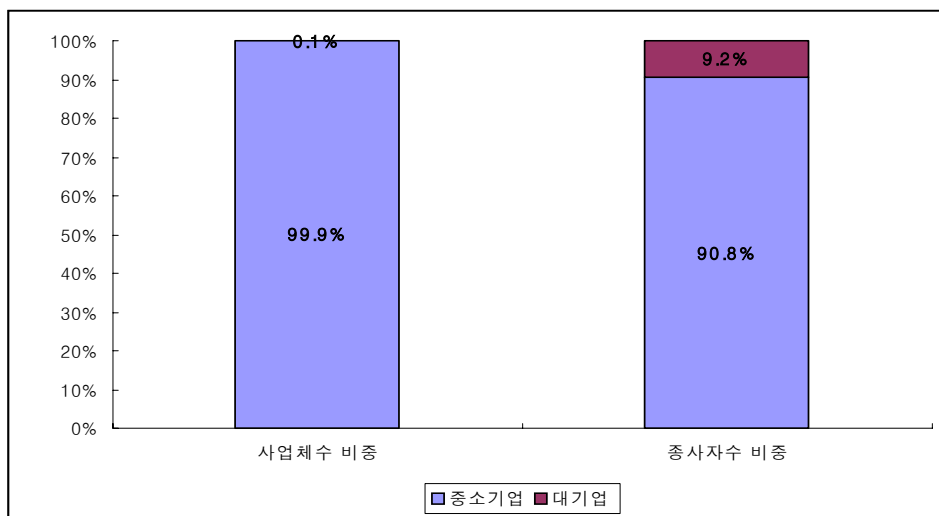
제 3 절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역할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인천지역경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업체수와 규모가 지역 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 소득의 균형 배분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역할은 지역경제 비중 증대 효과 - 특히 고용창출 주도 -와 생산액·부가가치 비중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수출의 안정적 신장예의 기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고용창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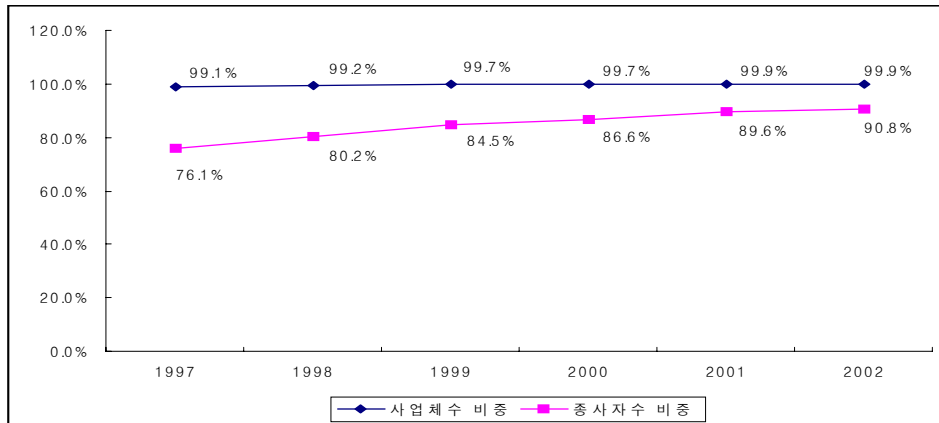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인천지역 중소 사업체수¹¹⁾는 총 14만 5천여 개사에 달해 1997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1인 이상 총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한 종업자수는 55만 여명으로, 전산업 총 고용의 90.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1> 참조).

한편 비중 면에서 살펴보면, 1997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비중은 0.8%, 종사자수 비중은 13.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1>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황 (전산업, 2002년 기준)

11)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8조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자본금을 기준으로 80억원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2-12>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비중의 변화추이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 순으로 중소 사업체수가 많으며,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으로 종업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7> 참조).

<표 2-7> 인천 중소기업의 산업별 분포(2002년 기준)

(단위: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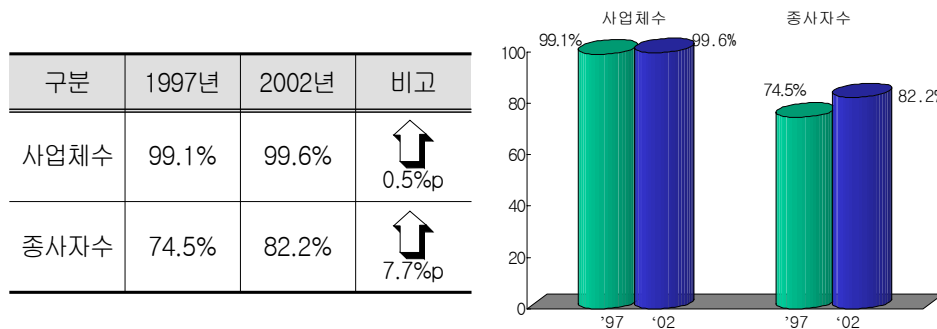
	전 체		중 소 기 업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산 업	146,166	614,134	145,969	557,392	99.9	90.8
농 업 및 임 업	7	80	7	80	100.0	100.0
어 업	1	4	1	4	100.0	100.0
광 업	39	714	39	714	100.0	100.0
제 조 업	21,139	231,207	21,098	200,110	99.8	86.6
전기,가스,수도 사업	10	339	10	339	100.0	100.0
건 설 업	3,298	25,434	3,294	23,737	99.9	93.3
도 매 및 소 매 업	39,433	112,471	39,398	105,122	99.9	93.5
숙박 및 음식점업	30,816	81,916	30,801	80,770	100.0	98.6
운 수 업	17,217	47,855	17,208	43,631	99.9	91.2
통 신 업	216	1,823	215	1,622	99.5	89.0
금 융 및 보 험 업	448	3,663	436	2,374	97.3	64.8
부 동 산 및 임 대 업	5,818	14,614	5,808	13,850	99.8	94.8
사 업 서 비 스 업	2,612	20,922	2,577	14,527	98.7	69.4
교 육 서 비 스 업	4,152	19,124	4,129	17,735	99.4	9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04	13,062	2,503	13,011	100.0	99.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5,983	12,880	5,978	12,278	99.9	95.3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	12,473	28,026	12,467	27,488	100.0	98.1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04.

특히 제조업 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인천지역경제에서 대기업의 성장을 크게 상회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제조업 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2년 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수는 9,548개사로 전체 제조업체수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고용의 82.2%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같은 해 전국 제조 중소기업의 비중(사업체수: 99.4%, 고용: 75.8%)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2-8> 인천지역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비중변화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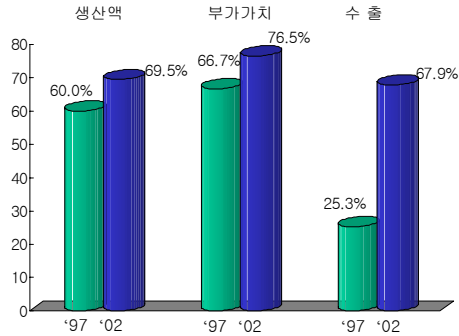


2. 생산액 · 부가가치 비중의 지속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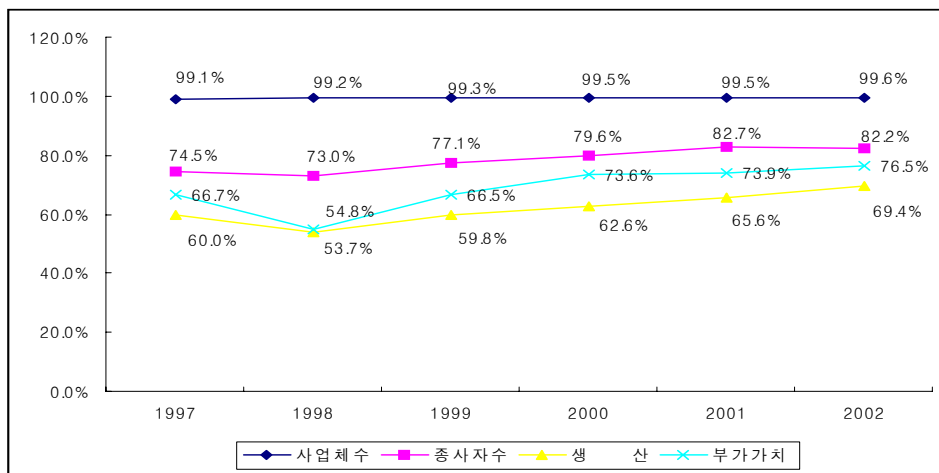
사업체수, 고용측면 외에도 2002년 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수는 총 부가가치의 69.5%, 생산액의 76.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같은 해 전국 제조 중소기업의 비중(부가가치 51.6%, 생산 49.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2-9> 인천지역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비중변화 추이(2)

구분	1997년	2002년	비고
생산액	60.0%	69.5%	↑ 9.5%p
부가가치	66.7%	76.5%	↑ 9.8%p
수출	25.3%	67.9%	↑ 42.6%p



이를 1997년과 비교할 때 2002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5조 3,240억 원으로 9.4%(약 7조원) 증가하였고, 같은 해 부가가치는 10조 350억 원으로, 9.8%(약 2조 3천억 원)가 각각 증가하였다(<표 2-9> 참조). 따라서 지역 내에서 대기업이 퇴출 내지는 이전계획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제조업체의 비중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림 2-13>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비중의 증가추이 (단위: %)

3. 수출의 안정적 신장에 기여

셋째,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내 수출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략적 수출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수출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의한 수출이 경기호황때는 크게 증가하지만 경기악화의 경우 크게 감소하는 데 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경우 인천지역의 수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1997년 인천지역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이 25.3%(1억 8천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67.9%(3억 8천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1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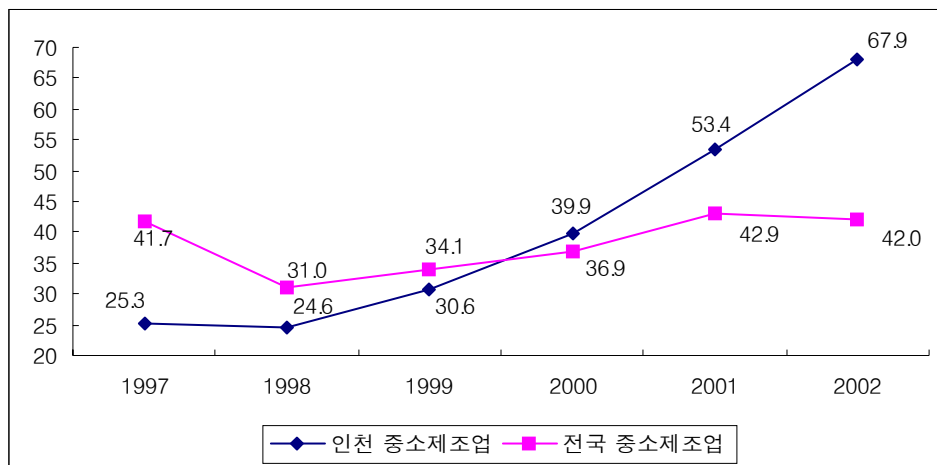
<표 2-10> 인천지역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천지역 총수출	7,261,017	6,544,937	6,222,032	6,386,235	6,025,885	5,680,684
중소기업 수출	1,834,389	1,606,992	1,906,666	2,548,933	3,218,810	3,859,482
비 중 (%)	25.3 (41.7)	24.6 (31.0)	30.6 (34.1)	39.9 (36.9)	53.4 (42.9)	67.9 (42.0)

주 : ()안의 수치는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전국 중소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판.



<그림 2-14> 중소제조업의 수출비중 (단위 : %)

제 3 장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인천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내부경영환경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사업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외부환경이라 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입지환경, 지원서비스, 행정기관의 규제정도 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인 중소기업 재생방안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 1 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하고,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업재생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 등 개별 기업내부의 역량강화방안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업재생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 tool, 특히 기존 주력제조업의 고도화 방안과 신산업 창출 및 육성방안도 함께 분석하였다.

2. 업무추진 방침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회수율 제고 도모를 위하여 표본조사 대상 업체를 업종별·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업무 추진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도모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은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명의로 시행하였으며, 업체 방문의 경우는 지역경제연구실에서 협조 기관(인천지역 중소기업청, 인천중

소기업지원센터, 산업단지공단 경인지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의 협조 하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 조사계획 및 주요 내용

본 설문조사의 조사 기간은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으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1,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964개로써 약 54%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실태, 기업환경, 향후 경영전략 및 경영관련 요망사항 등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실태에서는 주요 판매시장(내수/수출시장),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 유형, 자금조달 방법 및 기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기업 환경에서는 교통인프라, 접근성, 입지환경, 지원서비스, 정책지원 및 규제정도, 생활환경 등의 인천지역 내 기업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셋째 향후 경영전략에서는 업종유지,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 등의 기업 경영상의 향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 경영관련 요망사항에서는 판매확대방안, 안정적 인력수급방안, 신기술 개발, 자금조달, 비용절감, 입지환경 개선 등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4. 업무분장

본 설문조사와 관련된 협조기관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 협조기관 업무분장 현황

협 조 기 관	역 할	비 고
인천발전연구원	· 총괄·기획 및 남동공단 소재기업 대상 방문 설문조사	
산업단지 관리공단 경인지부	· 남동공단 소재기업 업체 대상 설문조사 협조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인천중소기업청	· 지역기술지원 관련 업체 대상 설문조사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 내부 설문조사 응답업체 및 우수중견업체 대상 설문조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IT 관련 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인천상공회의소	· 협의회 및 이사회 관련 업체 대상 방문 설문조사	
남동공단 협의회	· 협의회 소속업체 대상 설문조사	

5. 업무추진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2004. 3.2 ~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및 협의 · 조사 설문서 문항협의 · 조사대상 업체 확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2004. 3.8 ~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협조 요청공문 및 조사서 발송 * 협조기관의 경우 방문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지역중소기업청 -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 산단공 경인지부 등
	↓	
2004. 3.15 ~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서 회수독려 · 미회수 업체 조사 및 방문 조사 병행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지역중소기업청 -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 산단공 경인지부 -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등
	↓	
2004. 4.10 ~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설문조사 완료 - 사례분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2004. 4.19 ~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설문조사 완료 및 취합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2004. 4.26 ~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조사결과 분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	
2004. 5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전연구원

6. 설문조사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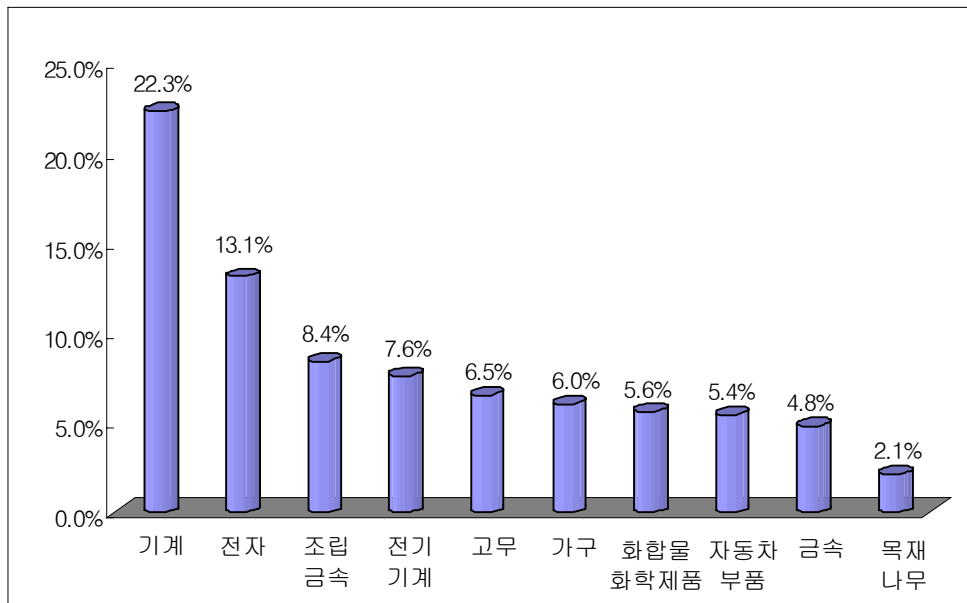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내 부 경 영 환 경	소재지 및 생산형태	· 대부분 본사 및 공장 인천 소재 · 완제품(일괄) 생산 위주	
	가동률	· 최근 3년간 추이: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	
	판매시장	· 주로 국내시장, 해외시장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양상	
	인력	· 높은 단순생산직 비율, 고급 기술 인력의 매우 낮은 구성 비율	
	연구개발	· 자체개발 위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미흡	
	자금조달	· 제1차 금융권 차입 위주	
기 업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정책적 지원 및 지원서비스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인식부족(홍보부족), 지원기관 위주 업무처리 · 환경규제, 준조세 등 각종 규제정도 심각 · 주거환경, 자연환경, 교육·훈련기반 : 모두 취약 		
향 후 경 영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현업종유지(67%), 공장이전계획(13%), 업종전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유지 시 경쟁력 제고방안 : 기술경쟁력 확보, 생산비용절감, 판매시장 확보 - 업종전환 고려 이유 : 내수감소·가격경쟁력 약화, 기술경쟁력 약화, 업종사양화 - 공장이전 고려 경우 생산설비의 완전이전이 69% → 제조업공동화 발생 우려 - 해외이전 고려 이유 :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신규시장 확보 		
문제점 및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고급인력 및 생산인력의 수급, 자금조달, 판로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 기존 거래처 주문 감소, 가격경쟁력 상실, 업체간 과당경쟁 등 - 수출 : 원자재가격상승에 의한 채산성 악화, 해외시장정보 부족, 환율변동 등 - 인력수급 : 높은 이직률, 인력부족, 신규채용 어려움 등 - 연구개발 :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 곤란,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 등 - 자금조달 : 높은 대출금리, 금융권 대출요건 강화, 신용보증 곤란 등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확대) 제품홍보·마케팅 지원, 물류 및 유통시스템 구축개선, 품질인증지원확대 · (수출확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해외바이어 및 시장정보 확대 제공, 보조금 지원 · (인력수급) 임금보조금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 산업연수생 제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신기술개발)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자금조달) 대출금리 인하(차등적용), 담보비율 인하와 신용대출 확대, 대출조건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 · (임지환경개선) 환경관련 규제 등 규제완화, 생산인프라 확대, 물류·유통인프라 확대 및 정보인프라 구축 		

제 2 절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실태

1. 일반현황

1) 업종별 구성

본 설문조사 응답 업체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제1차 금속·조립금속제품 제조업(1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3.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9.3%), 자동차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6.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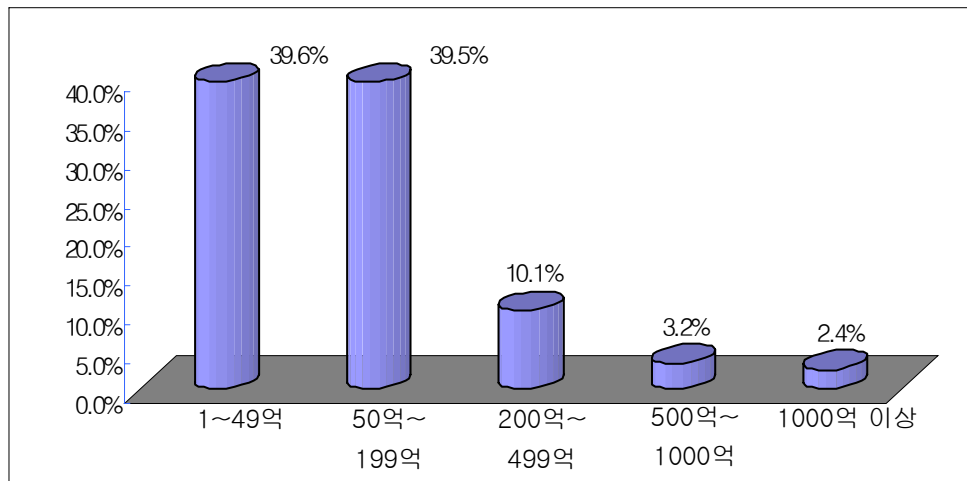


<그림 3-1> 업종별 현황

2) 매출액별 구성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371개사가 매출액 규모 50억원 미만이며, 200억 미만 규모까지 포함하면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 200~999억원 규모의 중소제조업체는 전체 응답 업체의 13.4%인 125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매출액 1000억 이상 업체는 전체 응답의 2.5%(2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매출액별 현황

3) 업종별 매출액 규모

<표 3-2>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전자부품·영상·음향, 기타 전기기계, 그리고 기타 기계의 순이며, 특히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의 경우에는 21.7%나 차지하였다. 이밖에 5대 주요 업종¹²⁾의 매출액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2) <표 3-2>상의 음영으로 표시된 업종을 나타낸다.

반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의 경우 응답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49억 미만의 영세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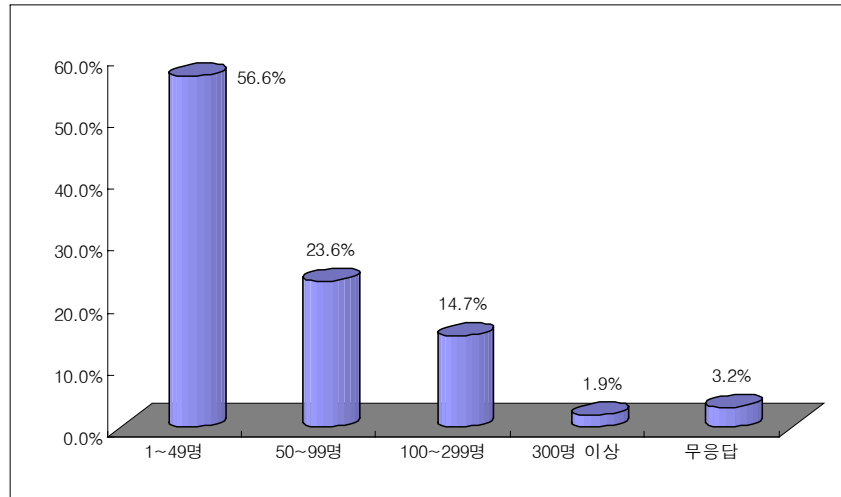
<표 3-2> 업종별 매출액 구성현황

(단위 : %)

업 종	1~49억	50~199억	200~999억	1000억 이상	무응답
음식료품 제조업	29.4	23.5	41.2	5.9	-
섬유제품 제조업	38.5	38.5	15.4	-	7.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7	33.3	-	-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0	25.0	25.0	-	25.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0	70.0	10.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8.6	71.4	-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3	50.0	-	-	16.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50.0	50.0	-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8.3	56.6	15.1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1.0	37.7	14.8	1.6	4.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2.6	26.3	21.1	-	-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9.8	40.7	14.6	2.4	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5	42.8	12.0	1.0	6.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1.7	29.9	11.5	5.7	1.1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40.2	35.2	15.6	5.7	3.3
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66.7	27.8	-	5.6	-
자동차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34.4	44.3	18.0	1.6	1.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1.6	47.4	15.8	-	5.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0.0	40.0	-	20.0	-

4) 종업원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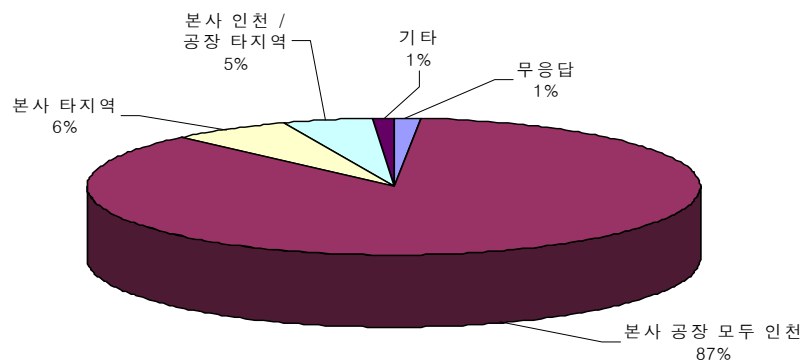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의 약 56.6%가 종업원 1~49인 규모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업체의 1.9%만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50~99인의 경우가 23.6%, 100~299인이 14.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종사자 규모별 현황

5) 본사 및 공장의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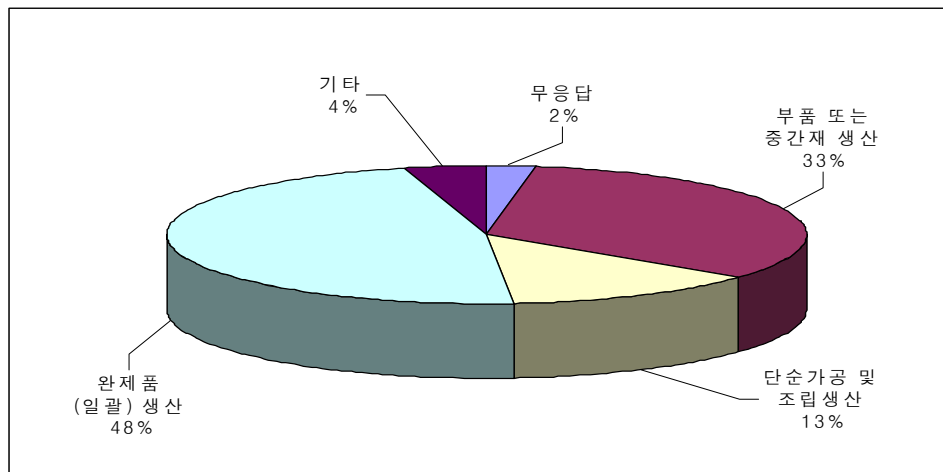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의 약 87%에 해당하는 807개 업체가 본사 및 공장 모두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경영실태

1) 생산유형

한편 설문대상 중소기업체의 생산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48%가 완제품(일괄)생산을 하고 있으며, 부품·중간재 생산업체는 33%,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업체의 경우 전체의 13%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유형별 업종을 세분하여 보면,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 위주의 업종은 전자 부품 및 통신장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출판·인쇄·복제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제품(일괄)생산은 음식/섬유, 목재/펄프/가구, 기계장비, 컴퓨터, 화학물, 의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가공(조립) 업종으로는 영상음향, 기타기계, 제1차 금속, 컴퓨터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요 5대 업종의 생산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에는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

이 62.3%, 42.3%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기계장비제조업과 컴퓨터, 의료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완제품(일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3가지 유형의 생산형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생산유형별 업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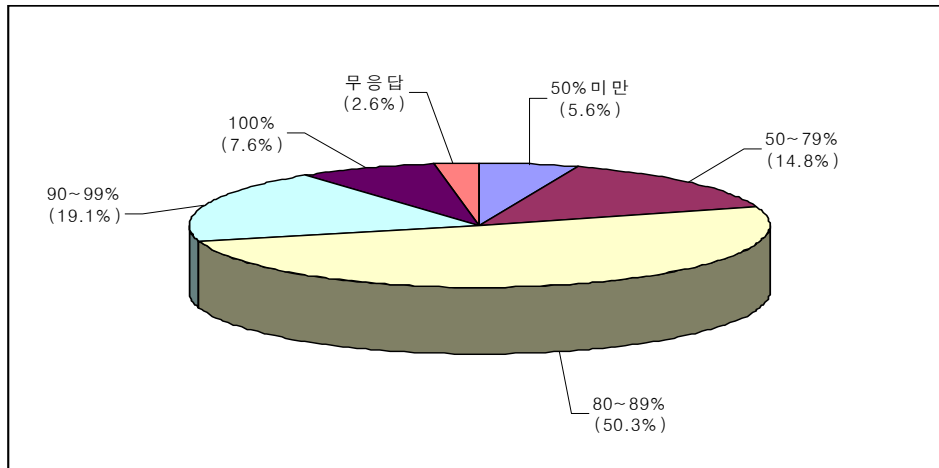
(단위 : %)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완제품 생 산	기 타	무응답
음식료품 제조업	-	-	88.2%	5.9%	5.9%
섬유제품 제조업	30.8%	15.4%	38.5%	15.4%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3%	33.3%	33.3%	-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50.0%	-	5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0.0%	10.0%	55.0%	5.0%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3%	14.3%	42.9%	-	28.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0%	16.7%	33.3%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5.0%	-	75.0%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6%	1.9%	69.8%	3.8%	1.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8%	13.1%	31.1%	4.9%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1%	5.3%	47.4%	-	5.3%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42.3%	13.8%	36.6%	4.1%	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4%	11.1%	57.2%	1.0%	2.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9.5%	16.1%	58.6%	4.6%	1.1%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41.8%	21.3%	36.1%	-	0.8%
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22.2%	11.1%	61.1%	5.6%	-
자동차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62.3%	13.1%	21.3%	1.6%	1.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4.0%	17.5%	63.2%	3.5%	1.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0.0%	20.0%	20.0%	20.0%	-

2) 가동률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77%인 718개 업체

가 가동률이 80%이상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반면, 가동률이 50%미만인 업체도 6%인 52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업종별 가동률

가동률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섬유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의 가동률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의 경우 가동률 80% 미만의 비중이 각각 38.5%, 35%,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대 주요 업종의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 80%이상인 업체의 비중이 88.6%로 다른 주요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718개 업체 중 469개 업체가 가동률 80~8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기타기계 19.4%, 제1차 금속/조립금속 14.5%, 전자부품 12.6% 등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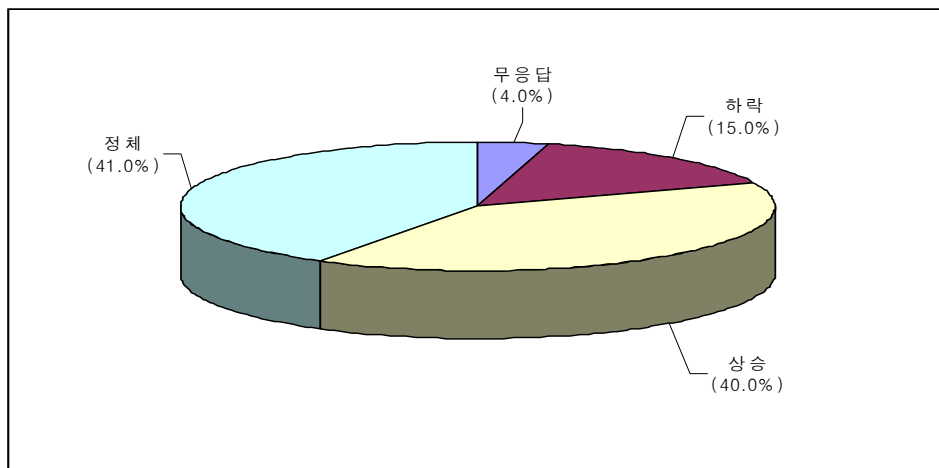
또한 가동률 90~99% 수준의 178개 업체에서도 기타기계 29.2%, 제1차 금속/조립금속 11.8%, 전자부품 11.2%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동률이 100%라고 응답한 업체에서는 기타기계업종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1

차 금속/조립금속업종이 5.6%, 전자부품업종이 18.3%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동률 80% 미만의 대표적 업종으로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응답 업체의 23.1%가 50%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5.4%는 50~79%라고 응답하였다.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의 경우도 가동률이 50~79%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가동률 추이

최근 3년간 가동률의 추세를 알아본 결과 응답 업체의 40%인 376개 업체가 상승추세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전체의 56%가 하락(15%) 내지는 정체(41%)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상기한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과 출판·인쇄 업종의 경우, 최근 3년간 가동률 추세에 대한 응답에서도 각각 80%, 84.6%, 99%가 정체 내지는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이들 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5대 주요업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가동률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주요업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응답 업체의 54.1%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상승추세라고 답한 반면, 제1차 금속산업과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체내지는 하락추세로 응답한 업체가 60.2%인 것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매출액 기준 30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00억 미만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낮아질수록 하락추세를 선택한 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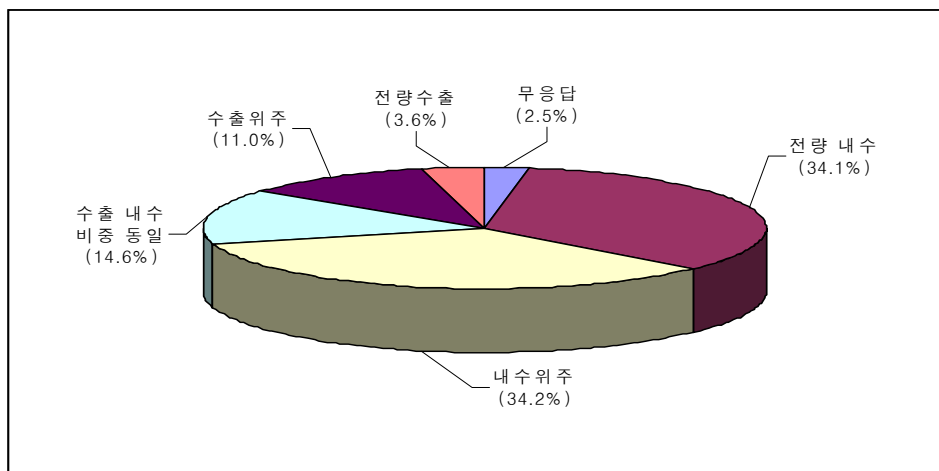
<표 3-4> 업종별 최근 3년간 가동률 추이

(단위 : %)

업 종	하락	정체	상승	무응답
음식료품 제조업	11.8	29.4	47.1	11.8
섬유제품 제조업	30.8	53.8	15.4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0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0.0	50.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0.0	50.0	15.0	5.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3	57.1	28.6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3	66.7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60.0	40.0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2	46.2	30.8	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5	52.5	32.8	3.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36.8	52.6	10.5
제1차 금속산업	15.6	44.4	40.0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1.8	38.5	37.2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6	43.3	44.2	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5.9	29.4	64.7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0.0	37.1	40.0	2.9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16.4	42.6	36.9	4.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7	50.0	33.3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	32.0	54.0	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2	36.4	45.5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7.9	32.1	46.4	3.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40.0	60.0	-

3) 판매시장 : 내수 및 수출

판매시장 구성을 볼 때, 응답 업체의 68%에 해당하는 637개 업체가 주로 내수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위주 또는 전량수출의 경우는 전체의 15%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15%는 수출과 내수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시장별 향후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내수 위주의 634개 업체 중 업종유지가 68.0%, 업종전환이 6.6%, 공장이전이 13.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위주의 137개 업체에서는 업종유지가 69.3%, 업종전환이 8.9%, 공장이전이 1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 업체의 약 70% 정도가 판매시장에 관계없이 향후 경영전략으로써 업종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업종별 판매시장

내수 및 수출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내수위주의 637개 업체에서는 기타기계장비(23.2%), 컴퓨터·전자부품(19.8%) 제1차 금속·조립금속(12.2%),

가구(7.1%)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의 경우에도 거의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출위주의 137개 업체에서는 컴퓨터/전자부품(32.8%), 기타 기계장비(18.2%), 제1차 금속·조립금속(18.2%), 섬유제품제조업 및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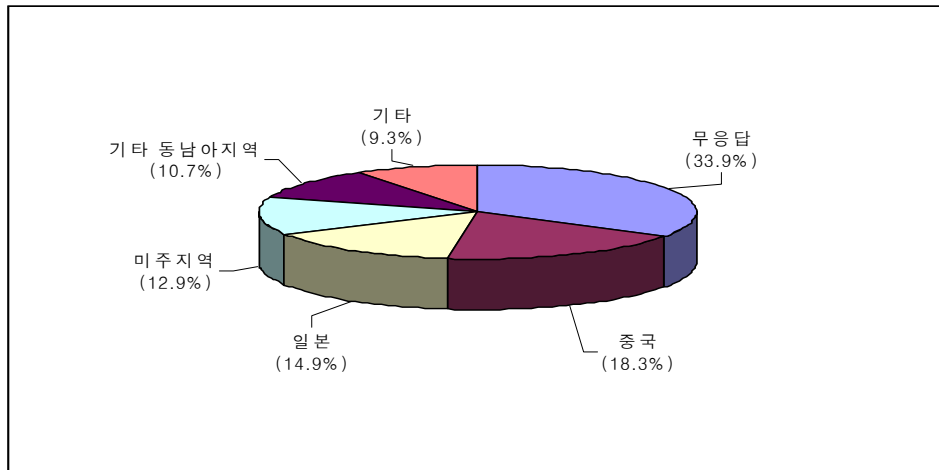
<표 3-5> 업종별 수출 및 내수 비중 현황

(단위 : %)

	전량 내수	내수위주	동일	수출위주	전량수출	무응답
음식료품 제조업	58.8	35.3	5.9	-	-	-
섬유제품 제조업	30.8	15.4	-	23.1	23.1	7.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7	-	-	-	-	33.3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0.0	25.0	-	25.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5.0	10.0	5.0	-	-	1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1.4	28.6	-	-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6.7	16.7	-	-	-	16.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5.0	50.0	25.0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8.3	43.4	15.1	11.3	-	1.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1	32.8	23.0	8.2	3.3	1.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8	36.8	15.8	10.5	-	-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0.1	33.3	14.6	14.6	5.7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4	42.8	14.9	10.1	1.9	1.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0.2	31.0	14.9	8.0	3.4	2.3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25.4	27.0	20.5	18.9	6.6	1.6
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22.2	44.4	27.8	5.6	-	-
자동차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31.1	39.3	13.1	13.1	1.6	1.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9.1	29.8	3.5	10.5	7.0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80.0	20.0	-	-	-	-

(2) 수출시장

한편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18%, 일본 15%, 기타 동남아시아 11%, 미주지역 13% 등인 것으로 나타나,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섬유제품,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등의 경공업 제조업은 주요 수출시장이 미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T관련 업종인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종과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은 중국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5대 업종의 경우, 제1차 금속산업 및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미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IT 관련업종인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업종별 수출시장현황

(단위 : %)

	중국	일본	미주	기타지역	무응답
음식료품 제조업	11.8	11.8	23.5	5.9	47.1
섬유제품 제조업	7.7	15.4	30.8	7.7	3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100.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5.0	5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0	5.0	-	10.0	75.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3	14.3	-	-	71.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33.3	5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	25.0	-	75.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6	11.3	3.8	28.3	24.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0	19.7	8.2	4.9	31.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5	21.1	10.5	5.3	42.1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4.6	15.4	21.1	11.4	29.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	15.4	7.2	15.4	30.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7.2	10.3	12.6	11.5	39.1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23.8	19.7	16.4	5.7	25.4
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27.8	11.1	16.7	16.7	16.7
자동차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14.8	8.2	19.7	6.6	37.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8.8	19.3	15.8	5.3	4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0.0	-	-	20.0	40.0

4) 인력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단순생산직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력의 경우 전체 응답 업체의 43%가 전체 구성비의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R&D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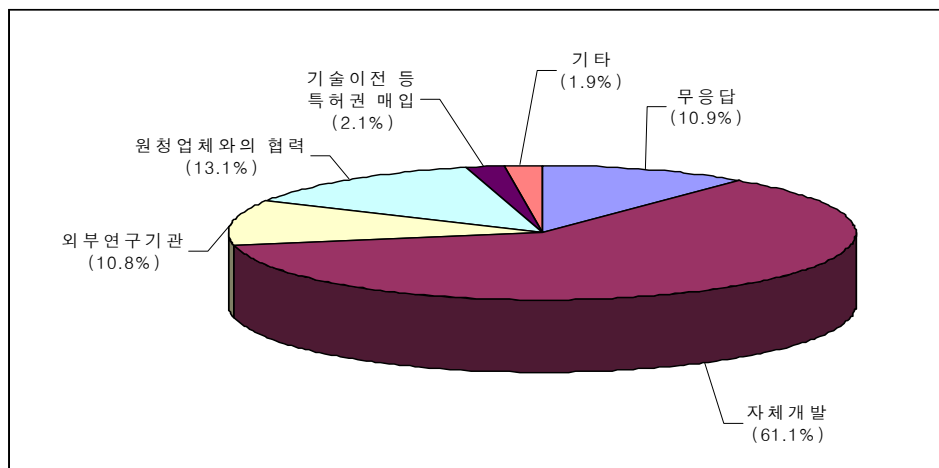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젊은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급격한 고학력화로 근로자의 가치관이 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효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

기업으로의 근로자 이탈도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응답 업체의 61%가 자체개발을 하고 있으며, 11%만이 외부연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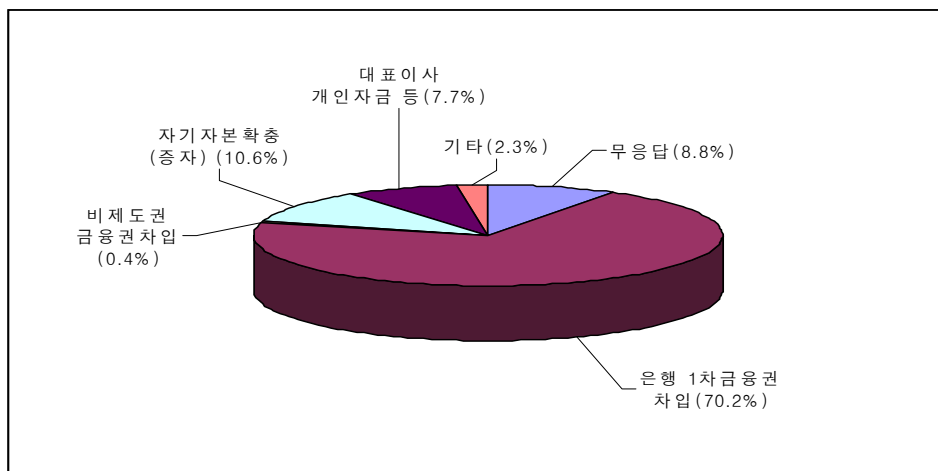


업종별 연구개발 유형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서비스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외부연구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의 경우 80%에 달하는 업체가 외부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업체의 60.4%가 외부연구기관을 이용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자금조달

자금조달의 경우 응답 업체의 70%이상이 제1금융권에 의한 차입인 것으로 응답해 제1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자기자본확충이 11%,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이 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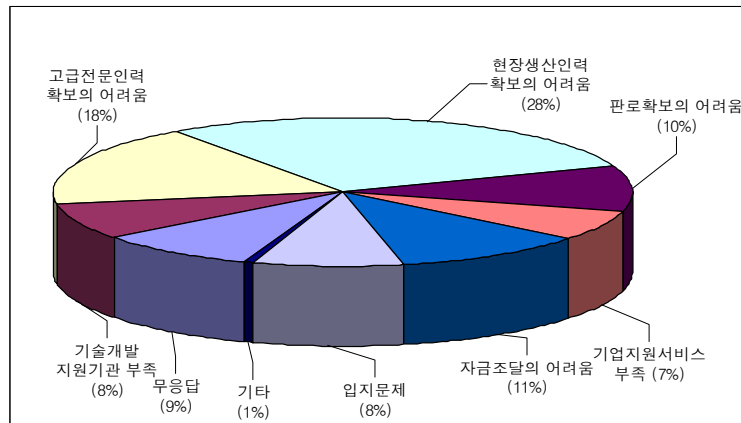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자금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 업체의 18.3%가 대출금리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의 과다함을 꼽았으며, 금융권의 대출절차 강화 및 담보부족에 따른 신용 보증의 곤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중소제조업의 경영환경상 문제점

1. 중소제조업 경영환경의 전반적 문제점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인천지역의 중소제조업체

의 경우 기업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응답 업체의 46.7%가 고급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선택했으며, 그 외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10.8%, 판로확보의 어려움이 10.2%, 그리고 입지문제, 기술개발 지원기관부족, 기업지원 서비스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

업종별·규모별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경공업(특히 목재/펄프, 섬유, 출판/인쇄, 제1차·조립금속)의 경우 현장 생산인력의 부족을 기업 환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으며, 중화학공업(특히 화학제품, 컴퓨터관련, 전자부품, 의료, 재생산업 등)의 경우에는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현장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기준으로 살펴보면, 50억원 이하 업체는 물론 50~200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현장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200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기업 환경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경영전략별로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업종유지의 경우 현장생산 인력확보가 가장 높고(29.3%), 고급인력 확보(20.3%), 자금조달(11.8%), 판로확보(9.3%), 기술개발지원기관 부족(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전환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약화가 가장 높고(25.0%), 내수(판매)감소(21.9%), 기술경

쟁력 약화(18.8%), 업종사양화(12.5%), 수출감소(7.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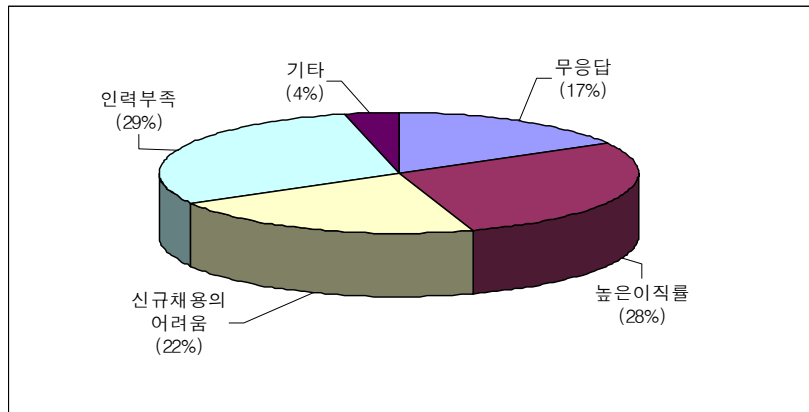
공장이전 특히, 해외이전의 경우 인건비 등 비용부담(31.2%), 현지 판매시장 확보(23.9%), 소비시장 확보(17.7%), 규제과다(8.3%), 원자재 및 현지자원 확보(5.2%)의 순으로 나타나 업종유지 및 업종전환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인력수급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채산성 하락이 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더불어 3D업종을 기피하는 노동인력으로 인하여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채산성 하락과 기계 가동률을 감소시켜 지역 내 중소기업체의 이전 및 부실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저가 공산품 및 기계류의 유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남동공단내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임금 동남아노동력에 의존한 안산지역 기업들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인천발전연구원이 기업 환경과 관련하여 최근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수급 어려움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에 따른 높은 이직률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인력부족의 경우가 전체 응답의 29%, 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인력확보 어려움의 주요 원인

특히 경공업(특히 목재/펄프, 섬유, 출판/인쇄, 제1차·조립금속)의 경우 현장 생산인력의 부족을 기업 환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으며, 중화학공업(특히 화학제품, 컴퓨터관련, 전자부품, 의료, 재생산업 등)의 경우에는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현장생산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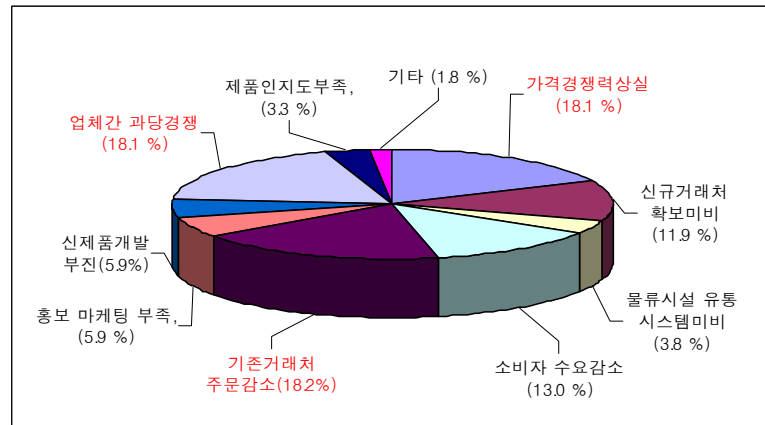
특별히 숙련노동자의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는 단순 노동자에 비해 더욱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숙련노동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지역 밖에서도 조달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판로확보

1) 내수관련 애로사항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제품판매 특히 내수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 응답 업체의 18.2%가 기존 거래처 주문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선택했으며 그 외

가격경쟁력 상실이 18.1%, 업체간 과당경쟁이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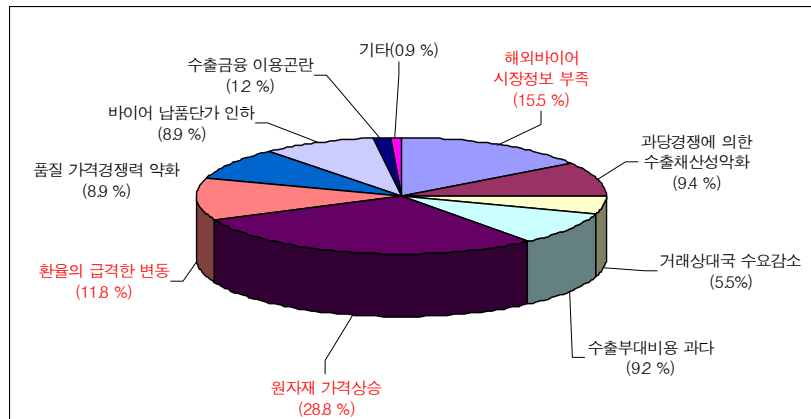


<그림 3-6> 제품판매 어려움의 주요 원인

2)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한편, 수출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28.8%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의 악화를 수출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해외 바이어 및 시장 정보 부족이 15.5%,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글로벌 경쟁의 심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빠른 추격 등 무역환경의 변화는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더해 최근 빠른 속도의 임금인상과 환율상승 등 국내 경제 환경변화도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여 수출을 확대하여 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경쟁력 하락, 수출채산성 악화 등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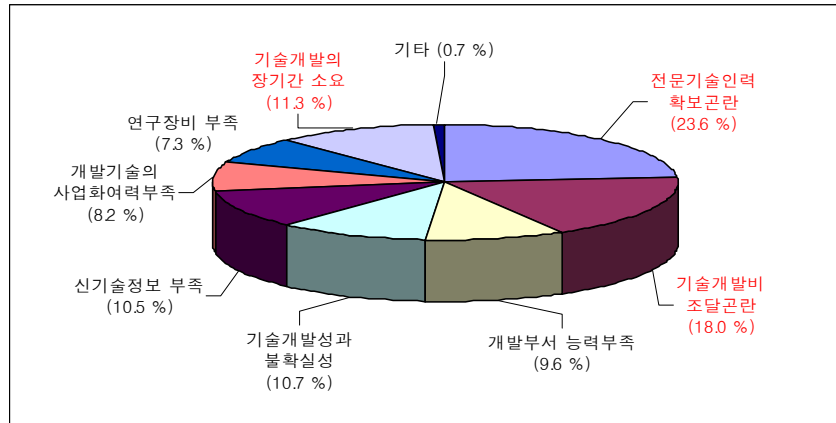
<그림 3-7> 수출 어려움의 주요 원인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제조업 재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중앙부처나 인천광역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기업 내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혁신 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들은 고유의 장점을 환경변화의 기회요인과 잘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 개발인력 확보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술개발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활력을 재생시키는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전이나 폐업 가능성이 높은 금형, 프레스, 도금 등 3D업종의 경우 IT기술접목을 통한 재생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역 중소기업체의 23.6%가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 외 기술개발비 조달곤란이 18.0%, 기술개발의 소요시간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10.7%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사업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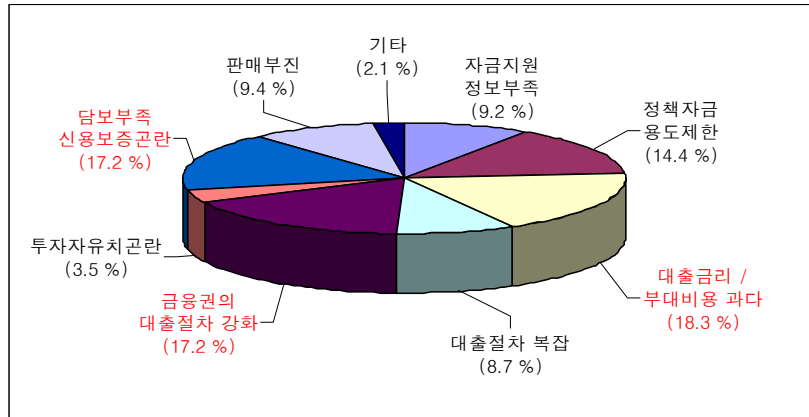
5. 자금확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들은 유통비용 증가와 함께 인천지역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가운데 어음거래 비중 및 어음회수기간 등과 같은 기업 금융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또한 대우의 부도 여파 이후 자금경색과 함께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¹³⁾

더 나아가 비성장산업에 대하여 업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 대출행태를 감안할 때,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대출기회는 서울지역 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⁴⁾ 즉,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어음 및 외상거래상 하청관계 구조 속에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이 거의 없으며, 금융기관들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기업을 기피하고 민간 소비금융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13) 김번욱, 「인천지역 제조업의 구조변화 배경 및 대응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2.

14) 한국은행 인천지점, 「인천지역 산업구조와 특화산업 :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0.



〈그림 3-9〉 자금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자금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 업체의 18.3%가 대출금리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의 과다함을 꼽았으며, 금융권의 대출절차 강화 및 담보부족에 따른 신용 보증의 곤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참조).

6. 입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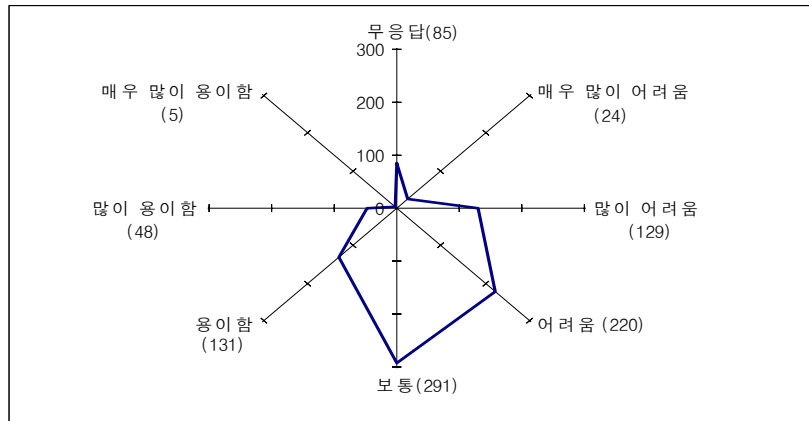
인천지역 제조업의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방산업공단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입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인천산업단지의 저부가가치성과 산재한 개별입지 등을 들 수 있다.

인천 제조업 발전에는 지역소재 공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인천지역에는 1970년대 초 부평지구에 수출공단 4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업체의 유치를 시작으로, 수출공단 5·6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공업단지, 인천목재공업단지, 남동국가공업단지 등 7개의 공단이 조성되어 운영중이다. 그러나 1990년 대 말부터 이들 산업단지의 역할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누계)의 경우 생산액은 10조 6,136여억 원으로 전국 산업단지 총생산액(311조 284여억 원)의 3.4%(전국 7위)로 2002년 3.6%에 비해 0.2% 감소하였다.

반면 산업단지 내 총 입주업체는 4,625개 업체로 전국 산업단지 총 입주업체(2만 8,847개)의 16.03%(전국 2위)나 차지하고 있어, 업체당 생산액 규모는 전국평균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결국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38%, 종업원의 35%, 생산액의 25%를 담당하는 남동공업산업단지에는 최근 지역 내 경제침체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으로 공단소재 업체들의 공장폐쇄, 혹은 중국 등으로의 이전에 따라 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재한 개별입지(특히 서구 검단지역 내)도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입지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지역 내 대부분의 개별입지 업체들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환경 및 관리상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서구 내 검단지역 주변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입지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 이후 무절제한 도시개발로 혼란한 도시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화합물관련 및 인쇄 제조시설과 같은 공해성 업종도 상당수 입지하고 있으며, 검단지역 남부의 폐염전부지 주변에는 공해성 공장이 집단화되어 입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열악한 입지환경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경인 고속도로 및 남북축 접근 도로의 정체는 인천소재 기업으로 하여금 혼잡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정체로 인한 유통비용의 증가로 서울 외각으로 이전하였던 중소기업들 다시 서울근교로 이동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3-10> 물류비 절감 용이성 여부(단위 : 개)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역의 입지환경에 대한 질문 중 물류비 절감 용이성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70%가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1%만이 물류비 절감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그림 3-10> 참조).

또한 인천지역 내 관련 산업간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33.5%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 업체의 55.9%가 보통 또는 용이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인천지역 내 지가 수준의 경우에도 응답 업체의 46.5%에 이르는 433개 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응답했으며, 11.8%만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유통비용의 확대는 인천지역 내부 제조업체간의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남북축 접근 교통시설의 미비(지하철 1호선 제외)는 원활한 산업네트워크 망의 구축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반제품을 이동하여 조립하거나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인고속도로의 정체 및 인천광역시 내의 정체로 인하여 산업의 혈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를 축으로 하는 경인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못하여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남쪽의 시화지구 및 반월

지구에 비하여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정체로 인한 시간손실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의 D회사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P업체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서구에서 주물을 떼와 남동2공단에서 커팅 및 기본 연마를 하고, 부평구내 수출산업공단에서 최종연마 및 광택을 내어 다시 서구에 위치한 D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즉, 인천광역시의 남북 및 동서로 이동함에 있어서 그 어느 곳도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에서 반(半)제품으로 머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제품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은 시화 및 반월 지구에 비하여 많은 유통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이는 남동공단내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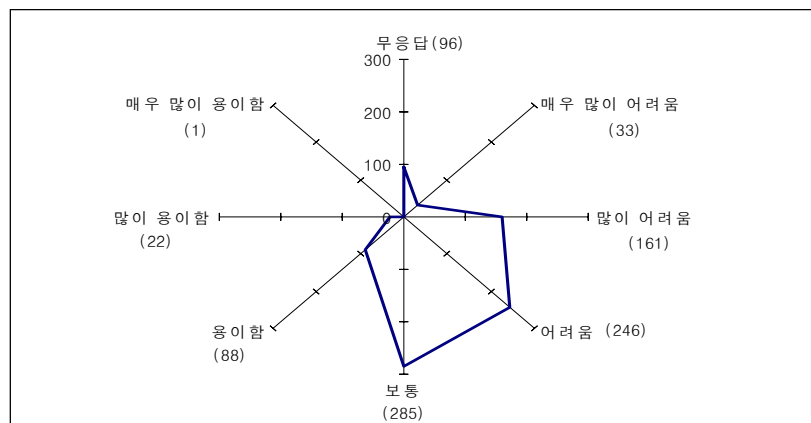
물론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있으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일반 화물차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시화 및 반월의 경우 남북축인 서부고속도로와 동서축인 영동고속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동공단 내로 이전한 A기업의 경우 시화에 있을 때 보다 유통비를 1.3~1.4배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차들의 남동공단으로의 진·출입 어려움(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제품출고에 따른 공차운행으로 화물차주들은 시화, 반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반제품을 이동, 가공 또는 조립·완성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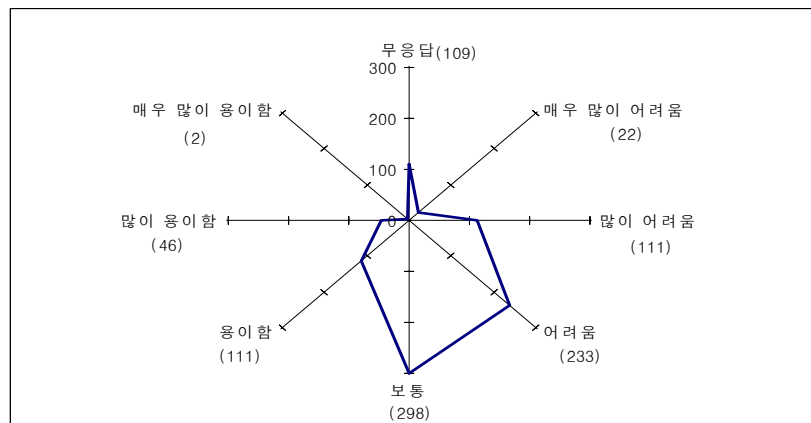
7. 기업서비스

인천지역 내 지원서비스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장개척 정보획득의 용이성 분야에서 인천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의 11.9%만이 시장개척에 따른 정보획득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7.2%는 정보획득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참조). 따라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체의 인력구성상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장개척 및 기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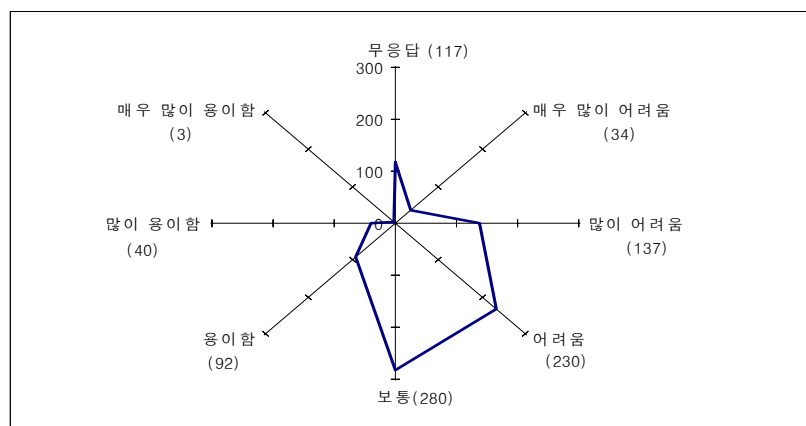
<그림 3-11> 시장개척 정보획득 용이성여부(단위 : 개)



<그림 3-12> 입주관련 서비스 용이성여부(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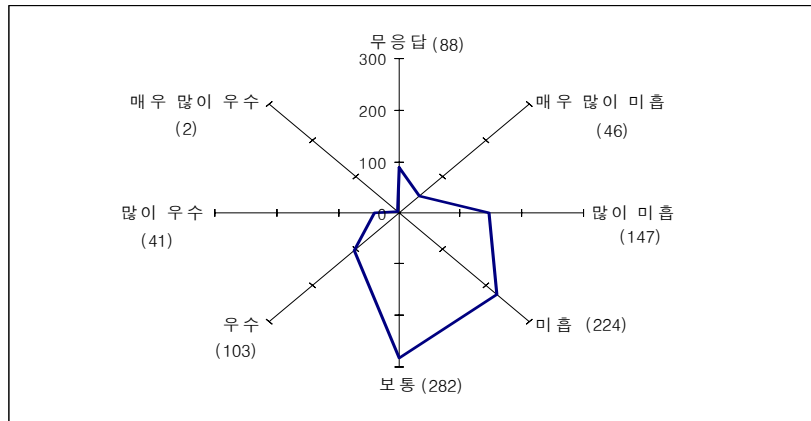
또한 입주지역 조성 및 관련서비스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 업체의 39.9%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17.0%만이 관련 서비스 획득이 용이하다고 답하였고, 혁신지원체계 접근 용이성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48.8%가 어렵다고 답했

며 10.7%만이 접근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2> 참조). 한편 생산서비스인프라(금융, 호텔, 통신 등)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 업체의 14.5%만이 이용이 용이하다고 답해 인천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체들을 위한 금융, 통신 등의 생산자 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생산서비스 인프라 용이성여부(단위 : 개)

더 나아가 인천 중소기업체들은 인천광역시의 일반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15.6%만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응답 업체의 74.9%가 보통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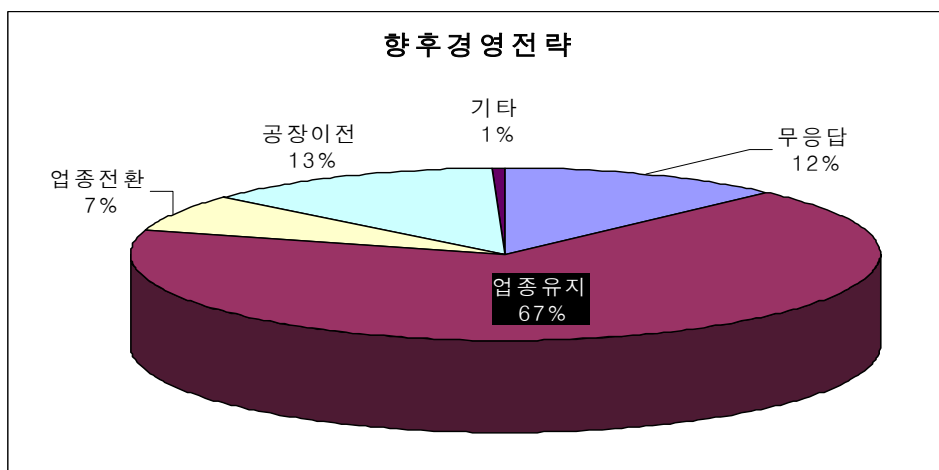


<그림 3-14> 일반 행정 지원서비스 우수여부(단위 : 개)

제 4 절 기업의 향후 경영전략

1. 종합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향후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67%가 현 업종을 유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전환은 7%, 공장이전계획도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업종별 향후 전략

주요 5대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 60~70%가 향후 경영전략으로 현 업종유지를 선택했다. 특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 73.1%, 제1차 금속/조립금속 69.1%, 화합물 및 화학제품 67.9%, 전자관련 66.4% 등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업종의 경우 63.0%만이 업종유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16.4%의 업체가 공장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업종유지계획이 45%에 불과한 반면 업종 전환계획이 25.0%, 공장이전계획 비중이 30.0%에 달하고 있으며,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의 경우에도 업종유지비중과 공장이전비중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업종별 향후 경영전략

(단위 : %)

	업종유지	업종전환	공장이전	무응답
전체 평균	67.2	6.9	13.1	12.8
음식료품 제조업	70.6	17.6	5.9	5.9
섬유제품 제조업	61.5	-	7.7	3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7	-	-	33.3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75.0	-	-	25.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5.0	25.0	30.0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5.7	-	14.3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0	-	50.0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5.0	-	-	25.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7.9	3.8	18.9	9.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5.6	8.2	8.2	18.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9.5	-	10.5	-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69.1	8.1	13.0	8.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5.4	7.7	12.0	13.5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3.6	4.6	11.5	10.3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66.4	9.0	13.9	10.7
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61.1	11.1	22.2	5.6
자동차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63.9	3.3	16.4	16.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70.2	-	14.0	15.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80.0	20.0	-	-

2) 매출액 규모별 향후 전략

매출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업종유지의 비중이 큰 반면, 업종전환 내지는 공장이전은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출액 1,000억의 경우 업종유지비중이 78.3%나 달하고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 비중이 각각 4.3%, 8.7%인 반면, 매출액 50억 미만 업체(전체의 39.8%)의 경우에는 업종유지의 비중이 60.4%,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 비율은 각각 56.3%, 43.4%로 조사되었다.

한편 매출액 50억~199억원의 경우 업종유지비중과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 비중이 각각 71.6%, 5.1%, 12.7%, 매출액 200~499억원 업체의 경우에는 71.8%, 6.4%, 11.2%를 각각 기록하였다(<표 3-8> 참조). 또한 매출액 200~999억원 업체(전체의 13.4%)의 경우 업종유지 비중은 74.4%로 매우 높은 반면,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은 각각 6.4%, 11.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매출액 규모별 향후 경영전략

(단위 : %)

	업종유지	업종전환	공장이전	무응답
1~49억	60.4%	9.7%	14.3%	14.3%
50~199억	72.4%	5.1%	12.7%	9.8%
200~999억	74.4%	6.4%	11.2%	8.0%
100억 이상	78.3%	4.3%	8.7%	8.7%

3) 생산유형별 향후 전략

한편 생산유형별 향후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업종유지의 경우 완제품(일괄생산)의 비중(48.8%)이 높고 부품생산 비중은 32.5%,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전환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완제품(일괄)생산유형 업체의 비율이 53.1%, 부품생산 비중 31.3%,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은 14.1%를 기록하였다.

<표 3-9> 향후 경영전략과 생산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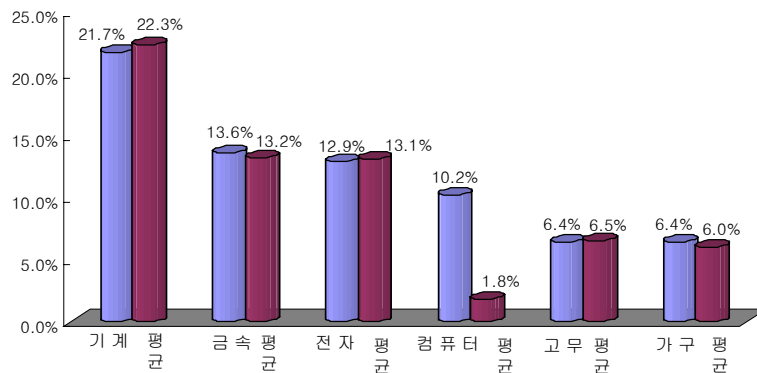
구분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완제품 (일괄) 생산	기타 및 무응답
업종유지	32.5%	12.1%	48.8%	6.5%
업종전환	31.3%	14.1%	53.1%	1.6%
공장이전	36.9%	14.8%	42.6%	5.8%

반면 공장이전의 경우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 유형 비중은 36.9%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완제품(일괄생산)의 비중(42.6%)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 참조).

2. 업종유지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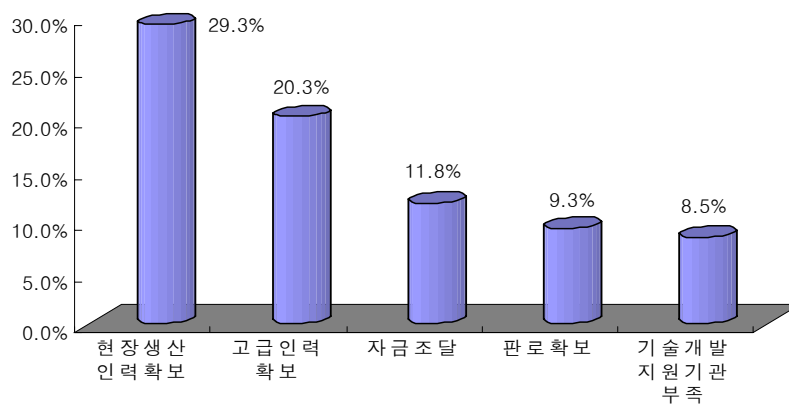
업종유지를 계획하고 있는 627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관련 21.2%, 금속관련 13.1%, 전자관련 1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0.2%, 고무 6.4%, 가구 6.4%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전체 설문대상 968개 업체의 업종별 평균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컴퓨터 관련비중이 (평균:1.8%)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 업종유지업체의 업종별 구성

2) 애로요인

업종유지를 고려한 응답 업체의 경우에도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바, 특히 현장 생산인력 확보난(29.3%), 고급인력 확보난(20.3%), 자금조달난(11.8%), 판로확보난(9.3%),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기관 부족(8.5%) 등이 주된 애로요인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업종유지업체의 주요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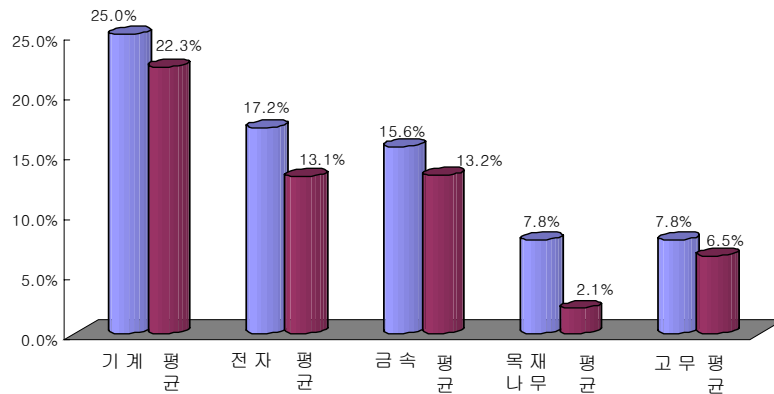
3. 업종전환

1) 현황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6.9%는 향후 업종 전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업종 전환계획이 2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업체 가운데 업종전환을 고려한 64개 업체의 경우 생산형태를 살펴보면 완제품의 비중(53.1%)이 높고, 부품생산 비중은 31.3%,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완제품(일괄생산)의 비중은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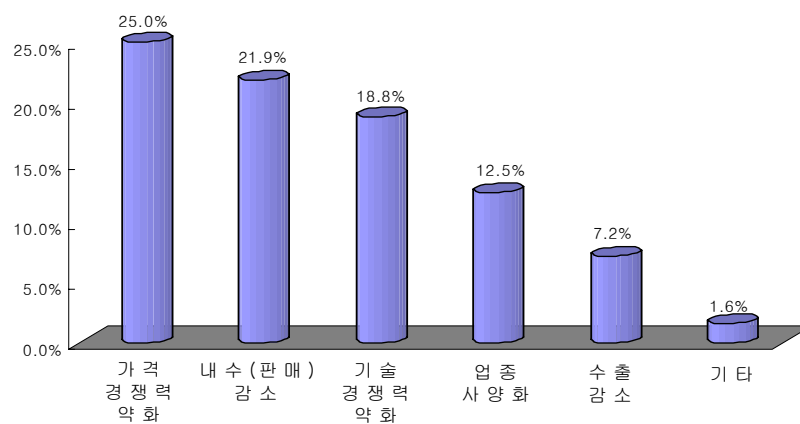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64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관련 25.0%, 전자관련 17.2%, 금속관련 15.6%, 목재·나무 7.8%, 고무 7.8%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전체 설문대상 968개 업체의 업종별 평균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목재·나무 비중이 (평균:2.1%)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7> 참조).



<그림 3-17> 업종전환업체의 업종별 구성

2) 업종전환 원인

업종전환을 고려한 응답 업체 대다수의 경우 업종전환을 고려한 이유는 가격경쟁력약화(25.0%), 내수(판매)감소(21.9%) 및 기술경쟁력약화(18.8%), 업종사양화(12.5%)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8> 업종전환의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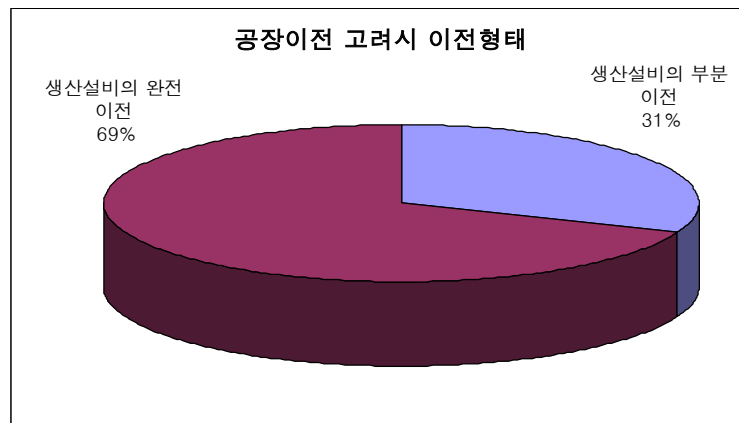
한편 업종전환을 고려한 업체 중 매출액 200억 미만의 업체는 내수(판매)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선택한 반면, 200~999억 업체는 가격경쟁력 약화, 1,000억 이상의 업체는 기술경쟁력 약화를 업종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다.

특히 업종전환 계획비중이 가장 높은 목재, 종이제품과 출판·인쇄·기록매체의 경우, 업종전환의 주요인으로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내수(판매)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장이전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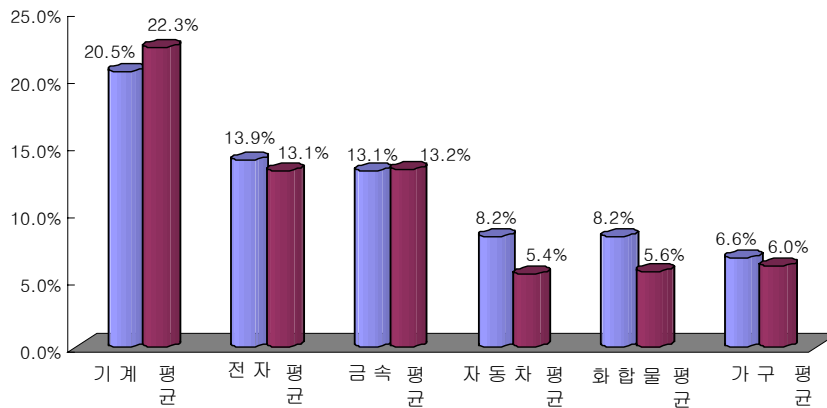
설문조사 업체 가운데 공장이전을 고려한 122개 업체의 경우 공장이전 형태를 살펴보면 69%가 생산설비의 완전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중 분석을 한 결과 특히 인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화되고 있는 경공업부문 업체들의 경우 이전을 고려한 업체의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공장이전계획 비중이 30.0%에 달하고 있으며,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의 경우 50%나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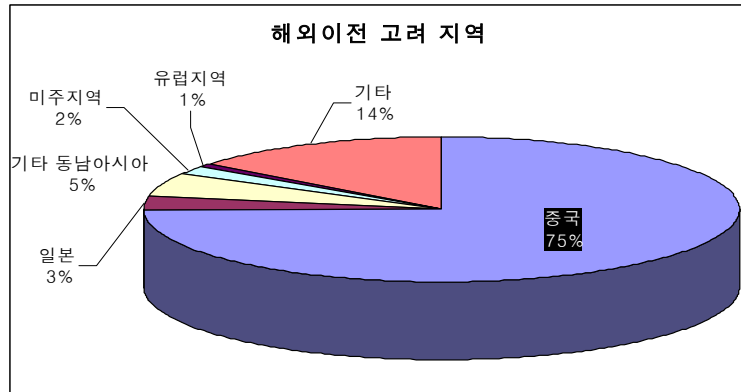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경우 향후 산업공동화의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공장이전 계획업체 122개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관련 20.5%, 전자관련 13.9%, 금속관련 13.1%, 자동차 8.2%, 화합물 8.2%, 가구 6.6%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전체 설문대상 964개 업체의 업종별 평균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자동차 관련비중이 (평균: 5.4%)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9> 참조).



<그림 3-19> 공장이전업체의 업종별 구성

한편, 공장 해외이전의 주요 대상국으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74.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이전 고려지역의 경우 응답 업체의 57%가 경기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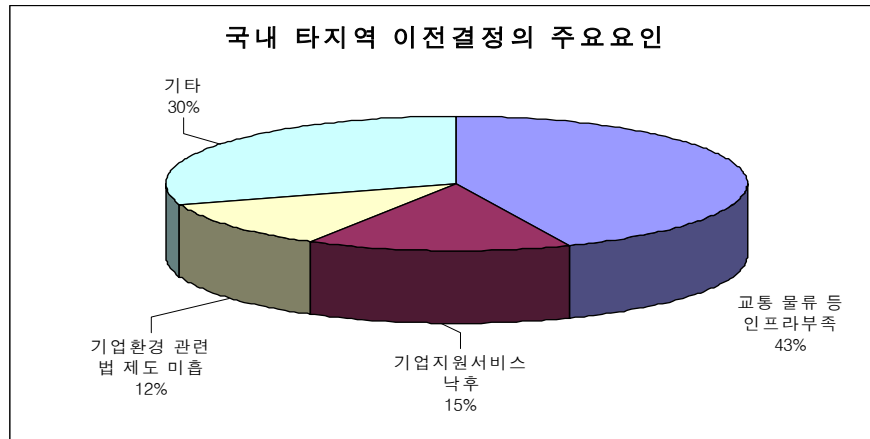


또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체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는 본 연구원이 기업 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에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대상기업(121개 업체)의 34.7%가 인천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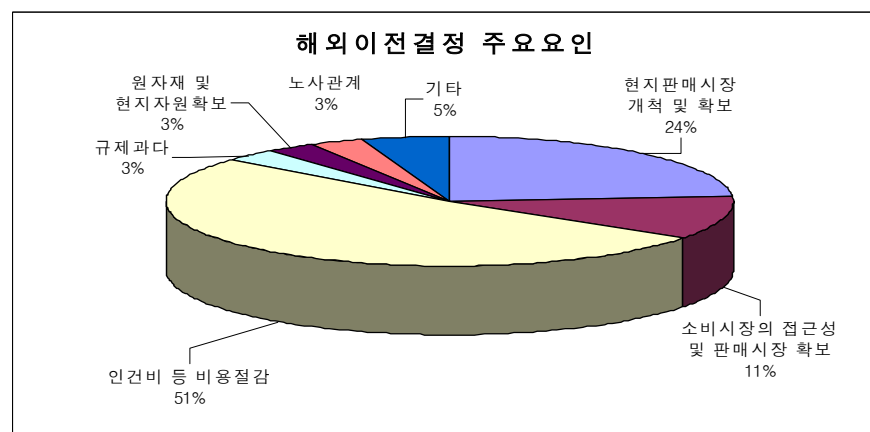
또한 응답 업체의 75.6%인 31개 업체가 설비 및 본사의 전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로는 경기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업체는 이전고려 업체의 12.2%를 차지했으나, 이전 대상지역으로 동남아나 기타 해외 국가를 선택한 업체는 적어 중국이 해외이전 대상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인

또한 공장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이전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낙후와 교통·물류 등의 인프라 부족을, 해외이전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원자재 및 현지 자원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외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부분이 전체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신규시장 확보 및 개척이 전체 응답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주요요인으로서는 교통 물류 등의 인프라 부족이 43%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만 등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체들은 교통 물류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 중소기업체의 67%가 업종유지, 20%는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인천지역 내 제조업 비중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높은 업종유지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향후 업종전환·공장이전 비중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기반 약화와 산업공동화 현상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체계적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 4 장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재생방안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가 중소기업의 재생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인천소재 중앙부처 관련 지원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는 지원정책 중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경영환경 개선방안 - 특히 인력수급, 내수/수출 확보, 자금조달, 입지환경 -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활용과 함께 인천광역시나 군·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출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제반 정책들을 동시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절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기본방향

경제·사회적 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축적 대응력·혁신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업해소 및 고용유지·창출은 현재의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경제·사회의 일차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유연성에 기초한 경쟁력과 고용흡수·창출력의 강점요소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적 기능 및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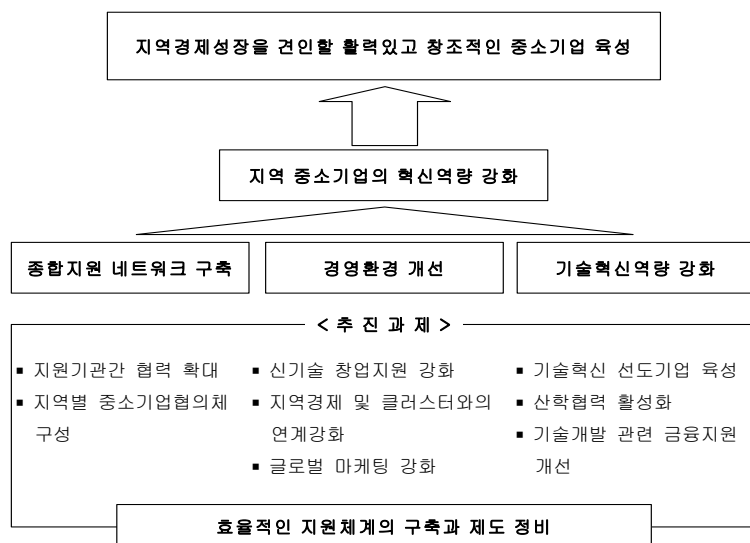
1.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목표

특히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은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경제 비중 증대, 고용창출 주도, 수출의 안정적 신장에의 기여 등 지역경제발전의 실현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되어야 지역성장의 원동력이

지역에서 창출되어 지역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지역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및 지역혁신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지역 기업재생의 비전인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활력 있고 창조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

이를 통해 향후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생산액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분권화의 과정에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및 기술혁신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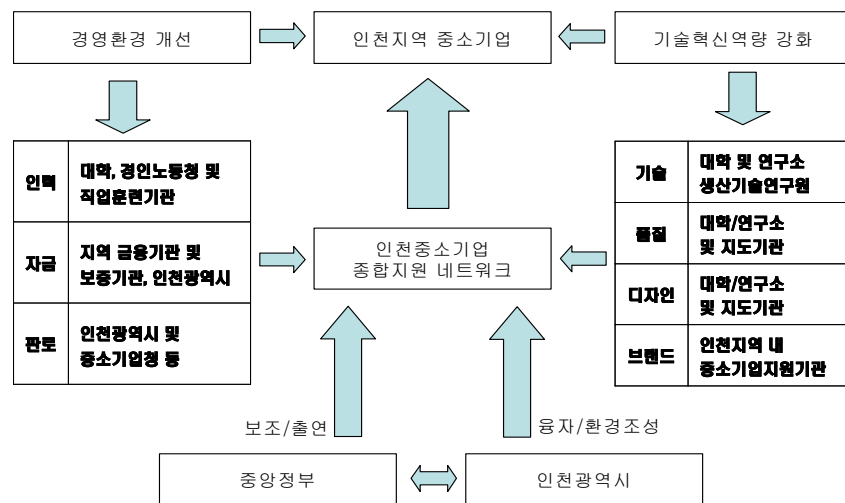
<그림 4-1>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목표

15)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비전은 장기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특히 송도신도시)과 연계하여 기술집약적이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육성으로 까지 제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는 기존 전통 주력제조업의 재생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비전제시 - 특히 전통 주력 제조업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 을 제시하고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의 기본 방향

그동안 추진해 온 중앙정부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지역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자금·기술·인력·수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지원기능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재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을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그림 4-2>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2003. 672쪽 내용 수정.

16) 하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기본적 업무협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TFT 구성 및 주관·참여기관 선정 등의 단계별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비즈니스터미널(Business Terminal)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별 경영관련 지원기능(자금, 판로, 인력, 수출, 입지 등)을 파악하여 정보화함은 물론 지역중소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이다.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원기능 및 기관을 전문화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단의 공급확대·우대지원을 실시하되, 인천광역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은 주로 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기관 이용 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미약한 신용력과 담보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에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지도체계, 정보 및 애로기술 지원체제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특히 소기업에 심화되고 있는 판매난을 지원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의 제작·배포,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개설, 중소기업 전담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상설전시판매장 등 현행 시책에 있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쟁력 약화로 인해 공장 폐쇄, 타 지역 (특히 중국 등)으로의 이전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내 기술혁신 지원기관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 정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과

정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TIC, RRC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지원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의 각종 기술개발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 Pool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에 적합한 인력수급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자체 이외에도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전반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소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관련 중앙부처의 현재 지원정책과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러한 제반정책들은 인천소재 중앙부처 산하 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활용과 함께 인천광역시나 군·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출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제반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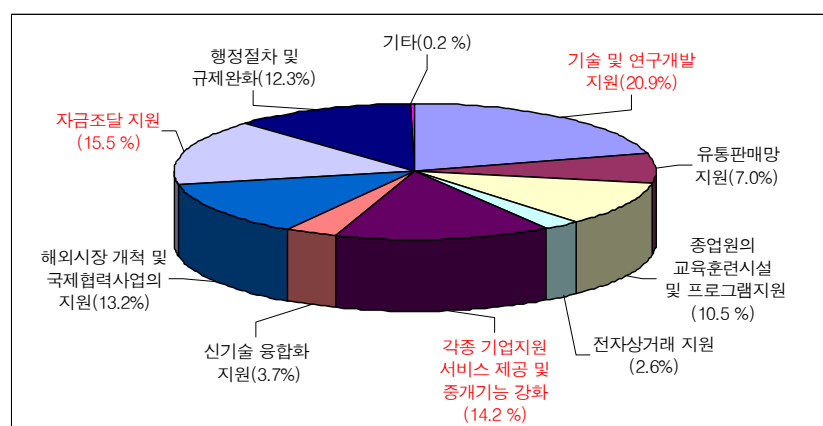
앞 절에서 언급된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의 비전 및 기본방향에 따라 본 절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3장 인천중소기업의 전반적 문제점 - 특히 생산성 위기 및 성장잠재력 약화, 저수익·과당경쟁 구조의 악화 - 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제도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전반적 개선방안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유망 중소기업선정, 벤처기업 창업 신속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 정보화 지원, 그리고 세계화 지원 등의 측면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상·운용상의 결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3-4>에 이미 나타났듯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체들은 기업경영환경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생산인력 및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자금조달 어려움, 자금조달상 어려움, 그리고 입지문제, 기술개발 지원기관부족, 기업지원 서비스 부족 등의 순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주요 역할 면에서는 상기한 문제점 순서와는 달리 응답 업체의 20.9%가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자금 조달지원이 15.5%,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역할 강화가 14.2%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인력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업원의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지원’(10.5%)에 그치고 있다(<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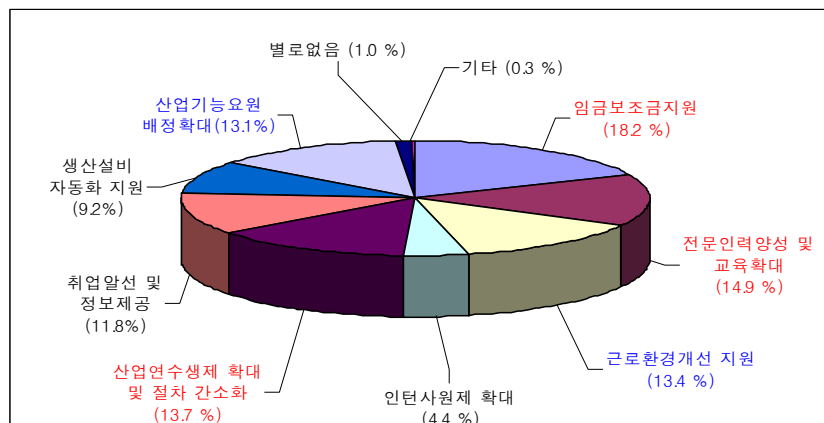
<그림 4-3>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의 주요 역할

또한 현 업종 유지 시 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응답 업체의 46%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선택했으며 그 외 생산비용절감(26%), 판매시장확보(23%) 순으로 나타났고, 5대 주요 업종의 경우에도 현 업종유지 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주로 기술경쟁력확보와 생산비용절감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인천광역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인력지원 시책강화, 판매확보 지원강화, 정책자금 지원강화, 기술혁신역량강화, 입지환경·기업서비스 개선 등의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2. 인력지원시책 강화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산노동력 확보 어려움에 따른 채산성 하락, 낮은 임금에 따른 높은 이직률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18.2%가 임금보조금지원을 꼽았으며, 그 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가 14.9%, 산업연수생 확대 및 절차 간소화가 1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수급 지원정책 현황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 인천지역 인력수급 지원정책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술인력지원, 인천인력은행 설치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기능대회 개최 및 참가, 그리고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인력의 양성을 통한 산업체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직종은 기계제도 등 30개 직종이고, 훈련기관은 공공, 공단, 인정 훈련원 및 사설 지정학원 등이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함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 알선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으로 현대적인 취업서비스 기관인 인력은행을 1997년 10월에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각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 수준의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기능 존중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기능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지원사업으로 들 수 있다. 즉,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등으로 이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중앙정부 인력수급 지원정책의 연계 및 활용방안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지원정책들은 최근 발생하는 실업사태의 충격완화와 효율적 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의 인력수급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인천지역에 활용·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인력수급을 위해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력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력통계 정비 등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력통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인력수급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내 고급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지역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2개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학과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정원의 과감한 조정과 새로운 공과대학의 신설, 또는 유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과별로는 장차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첨단기술 관련학과 증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지역 대학(예를 들어 재능대학) 내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업체 현장 기술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관된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및 관련 학과와의 산·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각 전문분야별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현장 연수의 확대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천대·인하대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 재학생 참가자의 현장실습학점 인정, 중

소기업 현장체험 참여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가 있다.

넷째,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과 Clean 3D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강화시키며, 작업환경개선은 전반적 경쟁력·생산성 강화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중기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분양의 가산점 부여, 자녀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적극 홍보 내지는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통해 인천지역에도 근로자 복지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외에도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창업 시 고용 노동자용 임금조성”을 활용하여 임금개선 -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력강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지역에서 이뤄지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표 4-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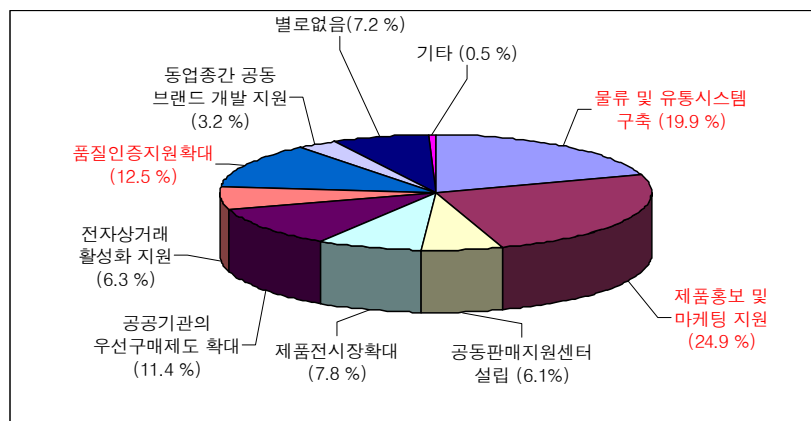
<표 4-1>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정책 비교

분 야	중앙정부(案)	인천시(案)
인력 확보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제 조기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지원법제 정비 - 조기도입기업 사회보장비용 경감 - 조기도입 연계 인력구조고도화 지원 ○ 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기반 정비 - 역점추진기간 연장 ○ 근로여건 개선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확대 - 인사노무관리 관행 개선지원 ○ 교육훈련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교육훈련 컨소시엄 개선 ○ 현장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수 시스템 구축 - 업종별·직무별 모델 프로그램 개발 - 현장연수 전문평가관리 시스템 강화 ○ 전문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인력 확보지원 - 외국 전문기술인력 도입활용 - 경영기술지원단 지원 ○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 고령자 적합 작업환경 구축 - 외국인력제도 구조고도화 정비 ○ 미래 인력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개발 실시 - 진로지도교사에 대한 홍보강화 - 기업가 정신 및 비즈스쿨 사업 확대 ○ 재직자 복지지원 대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특별법상 복지지원 대책추진 - 중기 재직자에 대한 경력개발지원 ○ 중소기업 정책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정책 연구전담기관 확보 - 인력실태조사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대상 금융지원 확대 - 근로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 교육훈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교육훈련 컨소시엄 개선 ○ 인력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 인력수급실태파악 및 인력 통계 정비 ○ 구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구생제도 확대 - 인턴사원제도 확대 및 취업연계 -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 임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보조금 지급

3. 판로확보 지원 강화

1) 내수확대

<그림 3-6>에서 나타났던 인천지역 내수 어려움의 원인들 - 특히 기존 거래처 주문 감소, 가격경쟁력 상실, 업체간 과당경쟁 등 - 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물음에 응답 업체의 24.9%가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꼽았으며 물류 및 유통시스템 구축이 19.9%, 품질인증지원확대가 12.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제품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따라서 향후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부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은 제품수명주기 측면에서 볼 때, 도입기에는 연구개발 및 생산이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되나 성장기 및 성숙기에 진입하면서는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마케팅이 지속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판로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 인천지역 판로확대 지원정책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제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상품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및 상품 백과사전 발간,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종합전시장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기반의 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제품홍보 및 업체소개, 제품 위탁판매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설전시·판매장의 경우 55평의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혜 업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지방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의 홈페이지(<http://www.inbex.or.kr>)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제품별 구분, 제품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중앙정부 판로확대 지원정책의 연계 및 활용방안

이러한 배경 아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판로 관련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독자적으로 마련

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계획이 원활하게 작성되도록 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파견 관련 지원사업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마케팅 전략수립과 실행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기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가운데 부족한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과 다양한 유통경로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전문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이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등을 통한 제품 판매 시 어떤 유통 채널이 해당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지를 컨설팅하고 유통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및 기술우수제품 구매의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품 인지도 확보 및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브랜드 개발 지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확충하되 기술개발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접근 및 지원과 신뢰받는 브랜드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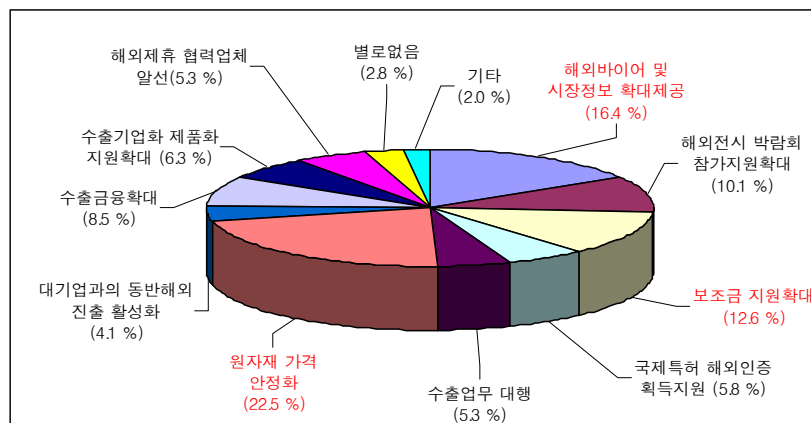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우선 품질인증체제를 강화하여 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관(연구소, 대학 등)과의 제휴 브랜드 개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device)의 개발과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 차원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별, 테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매체의 다양화 및 맞춤화를 위해 케이블 TV 및 인쇄매체 이외에도 잡지, 업계 홍보지 등의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출확대

또한 <그림 3-7>에서 나타났던 인천지역 수출 어려움의 원인들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해외 바이어 및 시장 정보 부족,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 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천 중소기업들은 응답 업체의 22.5%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16.4%가 해외바이어 및 시장정보 확대 제공, 12.6%가 보조금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그림 4-6> 참조).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수출전략 대신 적극적인 기술개발, 디자인 향상, 그리고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제품차별화 등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4-6>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

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 인천지역 수출지원정책

인천市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수출능력 배양 및 세계화 지향,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해외사업의 본격추진 등의 4가지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판로 개척단 파견, 해외전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사절단파견, 외국 구매단 초청 수출상담회개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수출능력 배양 및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원시책 현황들로서는 인천수출업체 안내책자 제작, 해외수출관련 정보제공, 인터넷을 통한 수출상품 홍보, 해외통상 공무원 파견, 외국 내 인천 무역사무소 설치, 무역업체 임직원 무역실무 및 인터넷 강좌 운영 등의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市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수출업체 해외마케팅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종합무역 업무자동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거나, 추가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2) 중앙정부 수출지원정책의 연계 및 활용방안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기본전략이 관련 중앙부처 특히, KOTRA와 무역협회의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실시하던 정책들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 내 수출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 품질, 디자인

인, 경영능력, 재무구조 등 기업의 핵심역량과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또는 수출 규모 등 수출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수출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혁신, 기술·품질, 디자인·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재생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 천진市, 일본 기타큐슈市,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설치 운영 중인 해외 무역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 확대를 통해 인천 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최신의 해외시장정보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업계의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 무역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무역실무강좌 운영, 중소수출업체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수출기업모니터 운영 등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천상품 전시관운영 활성화, 수출상품의 홍보책자 및 CD-ROM 제작, 해외수출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인천소재 수출기업 생산품목의 수출 가능성에 따라 수출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상담회나 해외박람회 파견 시 경쟁력에 근거한 파견품목을 선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은 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지역 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현지 무역사무소와의 실시간 정보 교류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천市는 지역소재 수출기업의 금융·보험지원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장을 받은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인수시에 외상 수출환어음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서 매입하도록 하며, 또 대기업 구매 승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상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판로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계획 중

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표 4-2>와 같다.

<표 4-2>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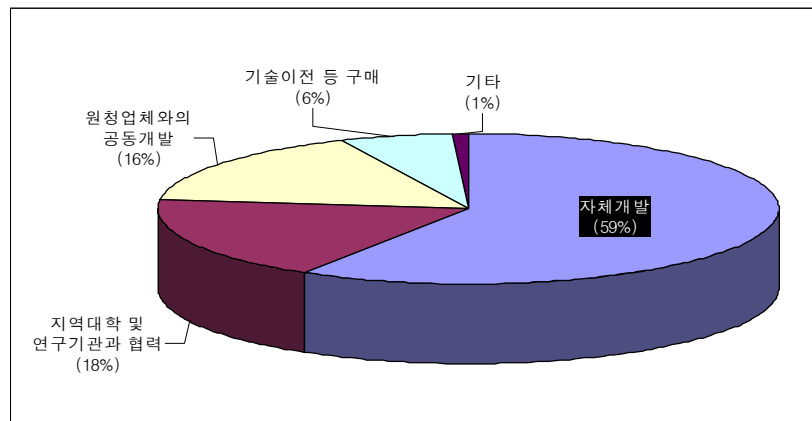
분 야	중앙정부(案)	인천市(案)
내수 확대 지원 방안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설치 - 마케팅 전문요원 양성 - 마케팅 컨설팅 지원 ○ 유통경로 다양화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경로 확보지원 전문회사 육성 - 전문 홈쇼핑 채널 확보 -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 ○ 홍보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박람회 공간 믹스 컨설팅 - 홍보매체의 다양화 및 맞춤화 ○ 브랜드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제도 개선 - 공동브랜드 사업제도 개선 - 서비스업 우수서비스 인증제도 - 지역별·업종별 디바이스 개발 ○ 중소기업의 조직화·협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인 활성화 사업 - 상점가 진흥조합 촉진사업 ○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시스템 확충 ·구매목표비율 설정제도실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선 ·적격 중소기업체 확인제도실시 - 공공구매 방식 개선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도입 ·단체수의계약제도 축소·폐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 개선 ·기술우수제품 구매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 구축 - 제품전시장 확대 ○ 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 - 공동판매지원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제품인지도(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지원 확대 - 동업종간 공동브랜드 개발 ○ 관련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 시스템 구축

분 야	중앙정부(案)	인천市(案)
수출 확대 지원 방안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식 사회적 공유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수출인식 제고 - 수출 네트워크 확충 - 소규모 수출 컨소시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역량진단 및 프로그램 개발 -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체계 구축 - 목표대상별·수출단계별 지원 - 수출기업화 사업 규모 확대 ○ 수출 선도기업 집중 육성 ○ 해외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지원자금 확충 -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마련 - 해외 마케팅 지원인력 육성 - 해외현지지원 거점 확충 -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 무역금융 배정비율 상향 조정 -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의무지원비율 설정 - 개발도상국시장에 대한 무신용장 거래에 대한 지원강화 ○ 중소기업 사이버 활성화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무역에 대한 홍보강화 - e-무역상사 육성 - 사이버 수출상담당 확충 - 수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강화 ○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통계인프라 확충·정비 - 정부차원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 - 해외 마케팅 지원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인지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특허 해외인증지원 확대 - 수출기업의 제품화 지원 확대 - 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 ○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확대 - 수출업체 마케팅 능력제고 - 무역실무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선도기업 대상 금융·보험 지원확대 ○ 시장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및 시장정보 확대제공 - 해외제휴 협력업체 알선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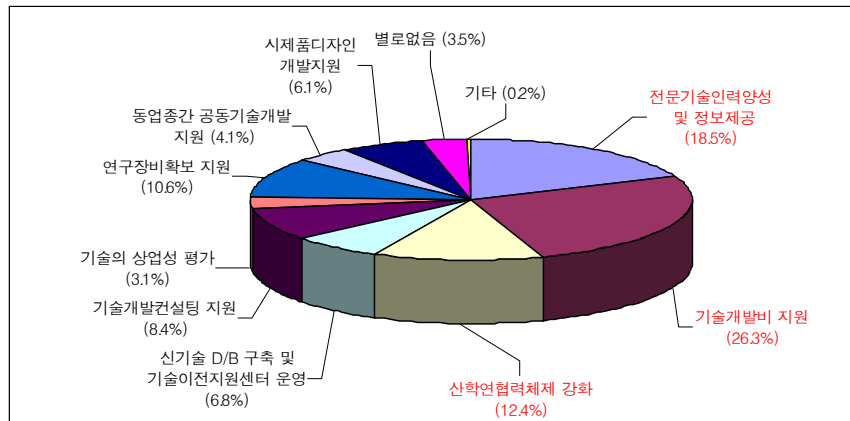
<그림 3-8>은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전문기술인력 확보난, 기술개발비 조달곤란, 기술개발의 긴 소요시간,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사업화 방안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천지역 응답 업체의 59%는 자체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답한 반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18%, 원청업체와의 공동개발은 16%에 그쳐, 아직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기술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

더 나아가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26.3%가 기술개발관련 보조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8.5%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을, 12.4%가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선택하였다(<그림 4-8> 참조). 한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체계에 대해 응답 업체의 72% 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인천지역 기술개발 관련 지원정책

현재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첫째,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자율적 연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천대 및 인하대 등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단의 운영으로서,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학·연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본 지원단은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주요 지원대상으로는 구조개

선 지원업체, 업종별로는 기술과급효과가 큰 업체 등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디자인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들 수 있다.

셋째, ISO 9000 품질보증체제 인증 취득지원으로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품질 보증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원업체에 대해 품질경영 지도기관을 통해 인증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한 후 품질보증 체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ISO 9000 인증을 획득케 하고 있다.

넷째, 상기한 품질경영제고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범산업적 품질경영 혁신으로 고객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우수기법을 발굴·보급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고급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천시는 산업 디자인전 행사를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의 개발수요 촉진과 진흥을 통해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외국시(특히 일본의 기타큐슈시)와의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로서, 외국 도시와 체결한 산업기술협력 협정을 구체화하고 양도시의 주요 산업기반 관련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균일화 확립으로 불량률을 저감하여 관련 산업의 품질관리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일곱째, 상기한 산업기술 공동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기술자 교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 도시간 기술자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관리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여덟째, 인천시는 지역협력 연구센터(RRC)를 지원하여 지역의 핵심산업(인천의 경우 수송기계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인천의 황해권 및 수도권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지역산업 특성화를 도모하며, 인천소재 대학의 연구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고용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홉째, 인천시는 지역기술 혁신센터(TIC)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인력양성 및 재교육 시험검사 장비의 공동활용, 산업정보화 지원, 공통 애로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인천지역 기계·전자산업의 기술력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2) 중앙정부 기술개발지원정책의 연계 및 활용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우선 핵심역량을 기술인력 확보,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주력하여 21세기 지역경제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에 대한 마인드 조성과 기술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 지원

이러한 기반아래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하여 집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첫째, 중앙부처 및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비즈니스지원, 교육·훈련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되며,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천지역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연구 및 개발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기업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송도 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경영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인천소재 중소기업 기술애로의 주된 수요를 파악하여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중점기술 개발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을 활용하여 집중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의 여건상 개별기업의 독자적 노력보다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들의 공장설비기획이나 사무자동화를 연구기

관과 직접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업의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신기술 창업자 또는 연구개발형 창업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경우 담보력 취약, 판매실적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공적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창업촉진과 함께 생존·성장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 등으로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의해 어렵게 개발된 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이 실질적인 경영성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화 촉진 지원자금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2) 산·학·연 협력방안 수립

중소기업 자체 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 내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 외부 기술혁신 주체와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근의 기술변화 추세가 빠르게 복잡화·다양화·단수명화되고 있어 각 혁신주체의 강점을 결합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산·학·연 협력은 8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술개발에 따른 상품화의 빈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대학연구기관과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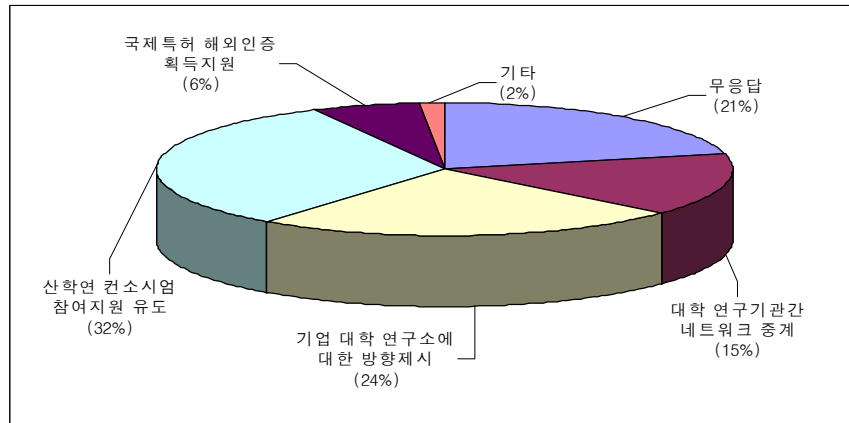
경우 응답 업체의 절반이상인 64.7%, 66.8%가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업체는 전체 응답 업체의 6.3%에 그치고 있어, 인천지역의 경우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사업 분야별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차후 사업 참여여부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지역 내 지원기관(중소기업지원센터,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상공회의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의해 개발되어진 기술의 상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 산·학·연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존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던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방식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특정 연구과제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광역시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32.0%가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지원 유도라고 답했으며, 아울러 24.0%가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방향제시를, 15.0%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중계를 선택하였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산·학·관 협력방안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인천광역시는 산·학·연·관의 자연스러운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개발과제를 탐색·발굴하고 도출된 개발과제를 바탕으로 협력 파트너 선정 등 수행방법을 사전기획하며, 가장 적합한 협력파트너와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협력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 공동 협력사업도 기술개발 단계에만 역점으로 둘 것이 아니라 과제탐색·발굴·기획하는 중간조직 활동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술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지역에서 이뤄지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표 4-3>와 같다.

<표 4-3>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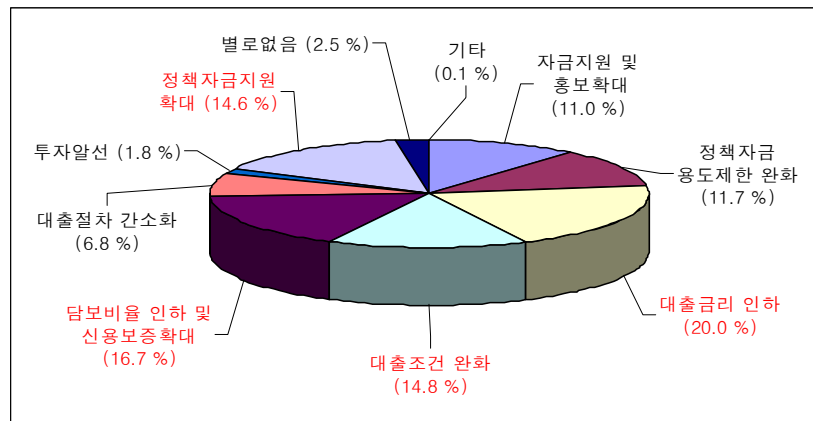
분 야	중앙정부(案)	인천시(案)
기술 개발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Biz 기업 발굴·육성 - 국가전략분야에의 참여확대 - 신기술 창업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술지원규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지원규모 확대 -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확충 - 수요견인형 기술개발 사업확대 ○ 기술시책간 통합성·연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체제 지원 - 기술개발 공동연구회 사업확충 ○ 기술혁신 기반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자문 활성화 - 시험검사장비 현대화·개방화 - 고급기술인력의 유입 촉진 ○ 타 혁신체제 사업·정책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와의 정책연계 강화 -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강화 - 대학내 One Roof Service 체계 구축 ○ 사업관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실효성 평가실시 - 기술개발 지원정보 DB화 - 통합관리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및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 동업종간 통합 브랜드 개발지원 - 시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 ○ 산·학·연 협력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축지원 -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확보지원 - 기술이전 지원센터 운영 ○ 기술인력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Pool 구축 ○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제도개선(직접지원→간접지원)

5. 정책자금의 지원강화

<그림 3-9>에서 나타난 자금조달 어려움들인 대출금리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 과다, 금융권의 대출절차 강화, 담보부족에 따른 신용 보증 곤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강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20.0%가 대

출금리 인하를 꾀았으며, 그 외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확대가 16.7%, 대출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지원 확대가 각각 14.8%, 14.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10> 참조).



<그림 4-10>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 인천지역 자금지원정책

인천광역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은 크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시설개체 자금지원, 그리고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을 들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책은 인천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조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 해소 및 생산 확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상의 한계 등으로 정책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개체 자금지원이다. 시설개체 자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및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이미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관련 경영여건개선과 관련한 지원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을 통한 보증사업을 실시하여,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사전 부도방지 및 자생력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중앙정부 자금지원정책의 연계 및 활용방안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중앙정부 자금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인천지역에 활용·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¹⁷⁾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매칭펀드 방식(매칭 비율)의 재정립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보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연방식도 현재의 자금대여 방식에서

17) 지역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1994년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되어온 결과, 현재 시·도별 자치단체가 상당한 규모의 지역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 잔액이 2002년 말 2조 6,116억원, 2003년 말 현재 2조 7,807억원에 달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위주에서 그 동안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중소기업육성자금 소요재원 규모는 2007년까지 매년 2,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대출금리의 인하 및 대출기간의 확대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타 중소기업지원기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
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대상 사업 분야를 재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사업 중 중소기업진흥
공단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창업 및 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자
금지원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운용 폭을 확대하여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
천시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인력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실제
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알선해 주는 경영컨설팅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대출 비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현재 일정수준으로 적용되고 있
는 금리를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차등금리의 적용으로 금융기관의 담보요구
비율의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원 확대를 통해 역할과 평가 기능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
로써, 신용리스크가 큰 인천지역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기능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주도하고 인천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는 방식의
지역자금 동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
시 재정기능 강화와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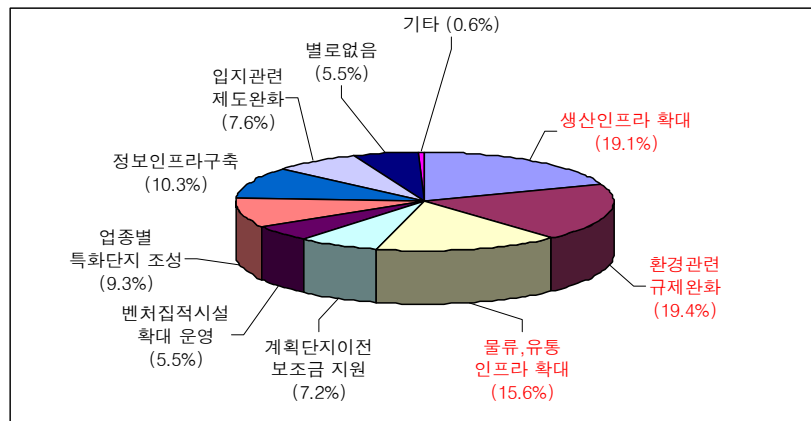
참고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지역에서 이뤄지거나 계획 중인 중앙정부 지원정책은 <표 4-4>와 같다.

<표 4-4>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정책 비교

분 야	중앙정부(案)	인천시(案)
자금 조달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비율 산정의 보완기준 도입 - 제재수단 및 방식 강화 ○ 총액한도대출제도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 점진적 확대 및 차입 금리 하향 조정 - 금융기관별 자금한도 배정기준 개선 - 지원실적 공개 의무화 ○ 정책자금 지원제도 운영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기준과의 연계성 제고 및 정책자금 기준 정립 - 통합운영체제로의 전환 - 정책금융 전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의 표준화 및 합리화 -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 유사중복성 해소 - 심사추천기능의 통합정비 - 효과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화(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체계 일원화 - 보증기관 간 역할분담체계 확립 - 지역신용보증 기능 확충 - 신용보증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 보증 운용방식 개선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신용정보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확대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운용 폭 확대 ○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신용보증재단 역할기능 확대 -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차등 금리 적용 - 대출절차 간소화 ○ 자금지원정보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홍보 확대 ○ 기타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금 동원체제 구축

6. 입지환경의 개선방안

인천지역 입지환경에서는 인천 산업단지의 저부가가치성과 산대한 개별입지, 그리고 열악한 입지환경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의 열악한 입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9.4%를 차지했으며, 생산인프라 확대도 거의 동일한 비중인 19.1%를 차지하였다. 그 외 물류·유통 인프라 확대 및 정보인프라 구축이 각각 15.6%, 10.3%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입지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에서 입지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먼저 살핀 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남동공단 혁신역량 강화방안 (주체 :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경인지부)

특히 남동공단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 구축된 산업기반시설을 활용한

혁신환경 조성과 산업단지 관리체계 및 기존 네트워크 구축사업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천지역 최대의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남동공단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한 단기간에 남동공단 혁신환경의 조성을 위해 단지 내의 정비된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지원시설 구비가 필요하다. 특히 남동공단 관리경험과 정립된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입주업체간 연계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 입지환경 개선방안

또한 인천광역시는 입지환경개선을 혁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인천도시계획’의 공업 용지를 전부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인천지역 내에 산재한 공장입지현황을 감안할 때,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청라지구의 배후지로서 향후 관련기업 유치를 감안할 경우, 공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공업 용지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업용지의 재조정 혹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관련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지역별 공장 분포를 고려하여, 산재된 공장의 재배치를 위한 공업지역 확대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공업지역 지정으로도 부족한 공장입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확보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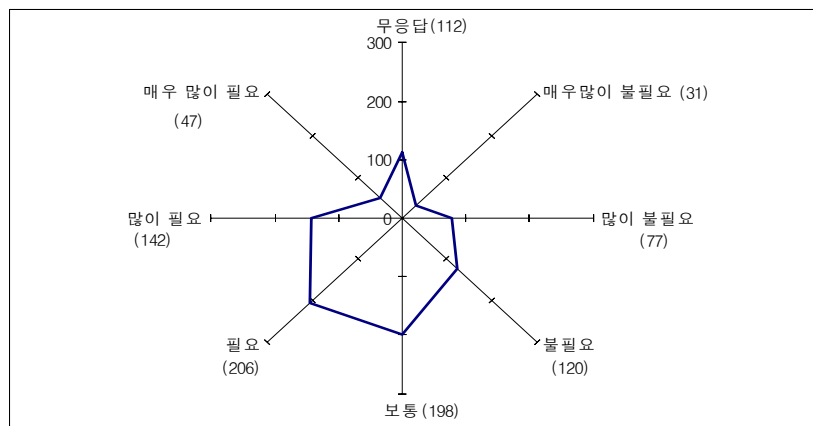
7. 기업서비스의 개선 방안

<그림 3-11>에서 <그림 3-14>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시장

개척 정보획득의 어려움 - 특히 시장개척 및 기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입주지역 조성 및 관련서비스 접근 어려움, 생산서비스인프라(금융, 호텔, 통신 등) 이용상 어려움, 일반 행정서비스 관련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인 기업서비스 측면과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기업 서비스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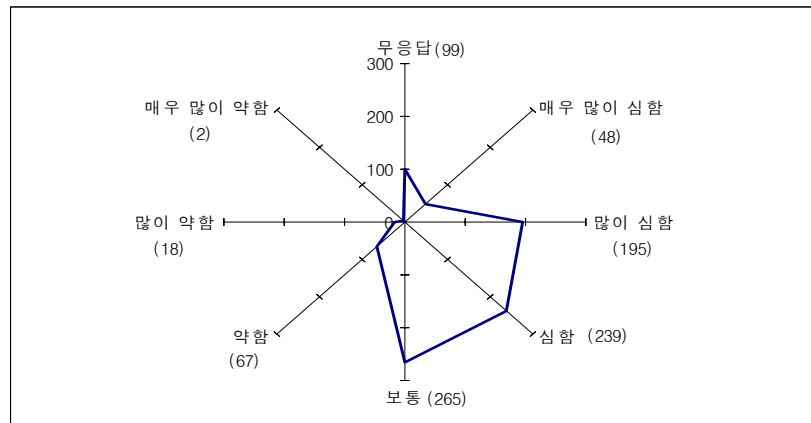
인천지역 중소기업체를 위한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각종 서비스 지원에서는 정보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응답 업체의 54.0%로 나타났으며, 협력 중개 서비스 면에서는 응답 업체의 46.7%가, 기업컨설팅 서비스는 42.3%,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은 응답 업체의 37.7%가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참조). 따라서 지원관련 정보제공 확대, 협력 중개·기업컨설팅 서비스 등의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림 4-12> 기업컨설팅 서비스 필요성 여부(단위 : 개)

2) 친 기업적 문화의 확산 : 행정규제 완화

또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체가 느끼는 중앙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규제정도는 환경규제, 준조세, 수도권 규제정책적인 면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규제의 경우 응답 업체의 51.6%(<그림 4-13> 참조), 준조세의 경우 40.6%, 수도권규제정책은 40.3%가 규제정도가 심한 것으로 답하였다.



<그림 4-13> 환경규제 정도여부(단위 : 개)

이러한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준조세 및 행정규제 등은 기업유치 및 잔류에 장애가 되므로, 공무원의 대(對) 기업 마인드를 개선하여 규제 극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 완화 및 철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불필요한 행정적 관행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부문에 있어서 손실되는 인력 및 시간을 감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정규제에 있어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두어 기업의 설립과 이전을 어렵게 하는 원칙적 규제(positive System)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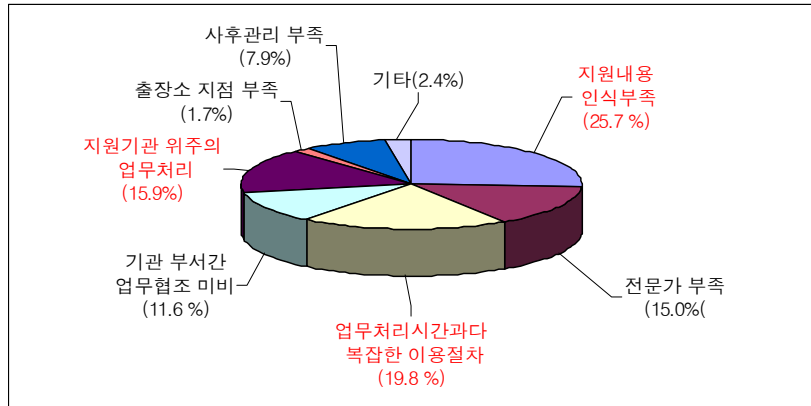
1. 중소기업 지원기관 역할 부문의 문제점

그동안 추진해 온 중앙정부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지역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자금·기술·인력·수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지원기능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 업체의 60% 정도가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상공회의소 등의 상공인조직, 지역금융기관, 대학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원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가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원인으로는 25.7%가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의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아,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인천광역시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정책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업무처리 시간과다 및 복잡한 이용절차가 19.8%, 지원기관 위주의 업무처리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지원기관 이용시 어려움의 주요 원인

2.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 강화방안

1) 중앙정부 차원 :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 (가칭)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향후 지역 중소제조업 재생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 중소제조업들의 애로요인을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혁신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추진체제 정비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에 있어 부처간 독립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① 지역자치단체 및 타

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원기능, ② 지역 중소기업의 재생을 위해 국가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원기능, ③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전문성과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이상과 같은 지역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협의 및 조사·연구, 시설·설비·인력의 상호활용,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협동기술지원협의회」, 「지역혁신포럼」의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의 Hub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중소기업 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 지원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중소기업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즉, 향후 지방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자조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간 원활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지역 내 업종별) 중소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기술교류협의회, 지역별 산·학·연·관 협의회, 이업종교류협의회 구성 등을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지방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활성화하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천지역 차원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상기한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인천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바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기본적 업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TFT’ 구성은 주관·참여기관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들 수가 있다. 현재 전국에는 15개 시·도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는 등 동 사업은 정책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도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당초 의도했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들의 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판매, 금융 등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One-Stop, One Roof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¹⁸⁾는 송도테크노파크와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인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촉하는 FRONT-LINE CONTACT POINT 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외 타 광역지자체에서의 인식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목적인 One-Stop, One-Roof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인의 제공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4년도에 자금지원과 디자인지원 사업이 추가되는 등 중기센터의 신속한 지원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18)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본 목적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부문에서는 2000년부터 경영컨설팅을 통해 500여건, 8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으며, 기술부문에서는 2001년부터 200여건의 현장 애로기술지도로 매년 20~30억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출부문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기술교류회 등의 사업으로 500여건 상담에 3백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금부문에서는 2004년 6월 현재 400여개사 1,200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시장운영사업으로 2003년부터 기획전시 20여회에 800개사 참여와 상설전시 120개사 1,300여 품목을 전시하였다.

또한 중기센터가 실질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개발·수행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기금이 전국 중기센터의 최하위 수준인 5억원 미만으로 능동적 사업수행에 한계²⁰⁾가 있다.

<표 4-5>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세부사업 내용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경영 컨설팅	· 상담실 운영,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 중개, 경영정보제공 및 교육
자금지원 대행	· '04. 4월부터 인천시 위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2004년도 2,65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 평가, 사후 관리 업무 수행
기술 지원	· 현장애로기술 전문가 지도 중개
판 로 지 원	·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및 박람회 개최 · 해외기술교류사업 지원
디자인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교육, 디자인 페어 개최
중소기업 네트워크 지원	·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사무국 기능 · 인천지역 중소기업간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및 활동 지원

<표 4-6> 7대 주요 도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 및 중소기업체 현황

구 분	전 국	서 울	부 산	인 천	대 전	울 산	광 주
직원수	320	94	23	9	20	18	10
직원1인당 기업체수	347	215	420	1,068	62.5	85.2	182.3
기업체	개수	111,025	20,254	9,699	9,614	1,250	1,534
	비율	100%	18.2	8.7	8.7	1.1	1.4
종업원	명	2,712,310	290,851	178,906	207,746	35,301	132,587
	비율	100%	10.7	6.6	7.7	1.3	4.9

자료: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 2004. 5.

인천광역시와 산자부가 출연한 기금 120억원 중 110억원이 무수익 자산인 지원기관 사무실 확보자금으로 소진된 상태이며, 매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출연금도

19) 일례로 중소기업인 방문 및 유선상담 건수는 2003년 일평균 10건에서 2004년에는 평균 5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그에 준하는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 경기, 서울, 대전 중기센터의 경우 운영출연금 외에 적립형 출연기금을 매년 지자체로부터 출연 받아 현재 경기 969억, 서울 165억, 대전 128억의 현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30억 이하의 기금을 보유한 중기센터는 제주와 전북뿐이며, 인천이 최하위로서 기금이 전무한 수준이다.

운영경비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금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규모, 산발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2004년의 경우 경영지원은 5개 사업에 85백만 원, 기술지원은 4개 사업에 166백만 원, 디자인지원은 8개 사업에 293백만 원의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조차도 대부분이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지원규모 및 지원업체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직접지원업무의 과감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1) 지원역량 강화

중기센터 정규직원 규모를 현재의 9명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별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써의 인력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및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원모델개발 → 적용 및 추진 → 사후관리 → 기업환경 개선」 등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개발 및 추진

지역 중소기업과 가장 많은 접촉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중기센터가 기존 공통적인 지원사업의 확대와 질적 수준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충된 기금을 「우수기술이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기금으로 무담보 자금지원을 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량 어음매입을 통한 간접 자금지원 사업」, 「지역 중소기업간 M&A 중개」, 「사업파트너 물색 및 납품알선 사업」 등을 통해 지원효과도 높이고, 나아가 중기센터의 수입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추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천市の 직접지원업무의 과감한 이양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천市 지원사업이 행정부서별 (경제정책과, 산업노사지원과, 과학기술과, 국제통상과 등)로 존재하나, 담당 과별로 원만한 정보교류 및 신속한 업무협력이 없을 경우 지원정책의 방향성 및 일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인천市가 출연한 중기센터의 위상제고 및 역할강화에 부정적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업무는 모두 경기중기센터에 이양하고 행정기관과 사업추진기관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행정신뢰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의 서비스化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포함한 선진 각국의 제조업은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역 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생산액과 부가가치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생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의 전통 제조업 가운데는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공단 내에는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전통제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 해외이전 여부 등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기업재생을 위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조사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분

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비롯한 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인천기업의 재생방안 연구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비중 증대, 고용창출 주도, 수출의 안정적 신장예의 기여 등 지역경제발전의 실현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지역에서 창출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는 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실태분석”에서는 인천 중소기업육성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내부경영환경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사업전략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업의 외부환경이라 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입지환경, 지원서비스, 행정기관의 규제정도 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인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반영하였다.

특히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 중소기업체의 67%가 업종유지를, 20%는 업종전환 및 공장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인천지역 내 제조업 비중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높은 업종유지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향후 업종전환·공장이전의 비중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기반 약화와 산업공동화 현상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체계적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생방안을 위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기업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경영환경 개

선방안 - 특히 인력수급, 내수/수출 확보, 자금조달 등 -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나 군·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출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제반 정책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함께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인천소재 중앙부처 산하 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력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력통계 정비 등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첫째, 인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력통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인력수급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지역 대학(예를 들어 재능대학) 내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업체 현장 기술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각 전문분야별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 연수의 확대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금 보조금 지원이나 종사자 대상 금융지원은 점차 지양하고,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수판로확보를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및 시장정보 제공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프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다양한 유통경로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전문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셋째, 인천광역시 및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별, 테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그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특히 KOTRA와 무역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수출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수출업계의 마케팅 능력 배양, 수출관련 홍보강화,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의 확대 및 활성화 유도 등이 시급하다.

기술개발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비즈니스지원, 교육·훈련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기술·경영컨설팅 활동 강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추진, 그리고 상품화 촉진 지원자금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산·학·연·관의 자연스러운 기술교류의 장을 통해 필요한 개발과제를 탐색·발굴하고 도출된 개발과제를 바탕으로 협력 파트너 선정 등 수행방법을 사전기획하며, 가장 적합한 협력파트너와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협력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출연방식도 현재의 자금대여 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대출금리의 인하 및 대출기간의 확대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지원대상 사업 분야의 재조정과 다양한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경영컨설팅차원의 적극적 홍보 수행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용대출 비율의 확대가 이루어

어저야 하는 바, 특히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로써, 신용리스크가 큰 인천지역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기능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강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칭)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중소기업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지역 내 업종별) 중소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기술교류협의회, 지역별 산·학·연·관 협의회, 이업종교류협의회 구성 등을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인천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바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기본적 업무협의도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 상황에서 ‘TFT’ 구성은 주관·참여기관 선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들 수가 있다. 특히 지원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천시의 직접지원업무의 과감한 이양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 5-1>은 지금까지 요약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들을 종합한 것이다. 각 분야별로 지원정책 집행 상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관련기관들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분야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5-1> 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지역 내 활용가능 정책(案)

인력확보 지원방안	내수확대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인력관련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실태조사 등 정비 - 인력 통계 정비 ○ 근로여건 개선 지원강화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확대 - 인사노무관리 관행 개선지원 ○ 교육훈련활성화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교육훈련 컨소시엄 개선 ○ 현장연수 확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수 시스템 구축 - 현장연수 전문 평가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마케팅 계획수립 지원 - 마케팅 전문가 양성 위한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 구축 - 제품발·테마별 전시회 기획·운영 - 제품전시장 확대 및 운영개선 ○ 판로확대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 - 공동판매지원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제품인지도(경쟁력) 확보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지원 확대 - 동업종간 공동브랜드 개발 - 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수출확대 지원방안	기술개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지원자금 확충 -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신설 - 해외 마케팅 지원인력 육성 - 해외현지지원 거점 확충 - 해외무역사무소 기능 및 역할 확대 ○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강화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 무역금융 배정비율 상향 조정 - 수출선도기업 대상 금융·보험 지원확대 ○ 시장정보 제공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및 시장정보 확대제공 - 해외제휴 협력업체 알선 ○ 수출 선도기업 집중 육성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품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육성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 신기술 기반 창업추진 ○ 자금지원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관련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 제도개선 - 상품화 추진 지원자금 확대 (직접지원→간접지원) ○ 산·학·연 협력 체제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축지원 -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확보지원 - 경영기술지원단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종간 통합 브랜드 개발지원 - 시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조달 지원방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재정비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확대 -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산업분야 재조정 ○ 대출 (중앙정부 차원 실시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차등금리 적용 - 대출절차 간소화 ○ 자금지원정보 접근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홍보 확대 ○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화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 기능 확충 (인천신용보증재단 역할 확대) - 평가가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차원 중소기업청 주축) (단기적으로는 지역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의 네트워크화 - 종합정보제공센터 역할 수행 - 지역혁신 지원기관 실태 조사 - 지역혁신 지원기관 보유 장비 및 지원능력 조사 ○ 지역별 중소기업 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 (1순위) ○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2순위)

■ 정책제언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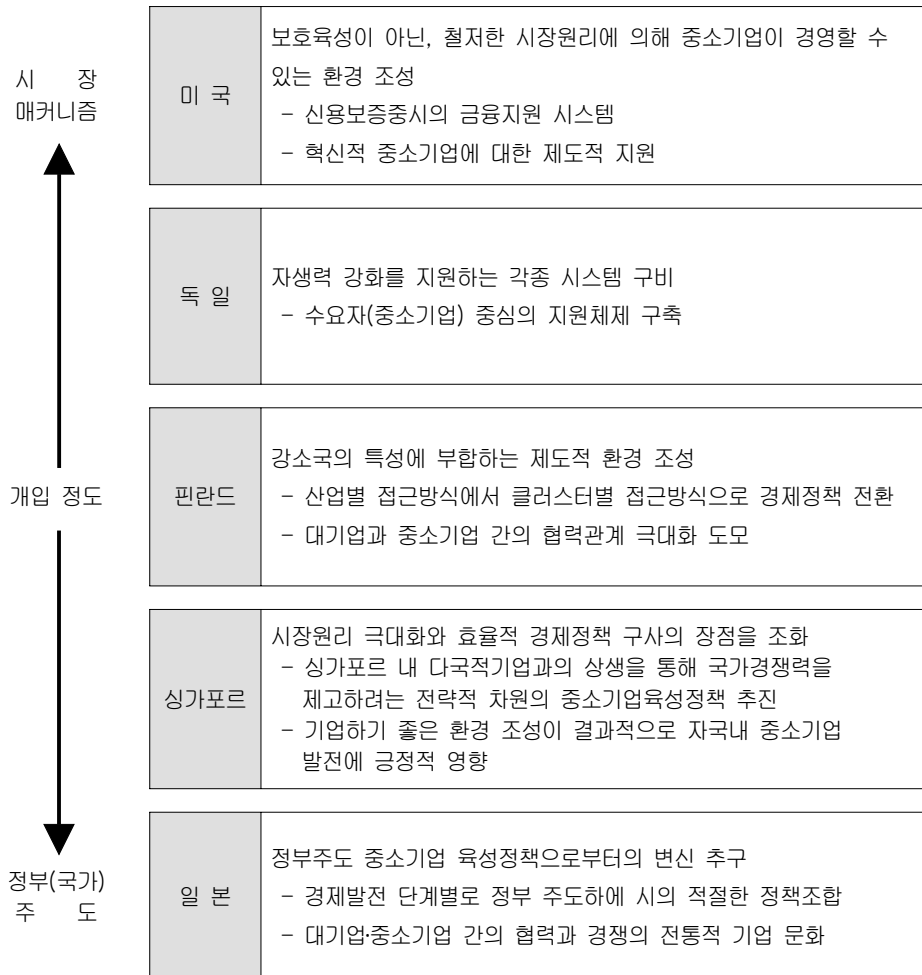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조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 본 재생방안들은 지원 예산 등 정책 적용상 한계나 효율성 측면에서 비현실적·비효율적 방안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임금보조금·수출보조금 지원 확대 등은 예산 한계는 물론 해당 업체의 장기적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종래의 직접적 지원 방식(특히 경영안정자금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특히 컨설팅,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인력양성 및 교육체계 강화 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1>에서 나타난 선진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보호육성이 아닌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미국),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독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극대화 도모(핀란드), 정부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의 변신 추구(일본) 방안 등은 인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전환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 업종유지 계획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제조업체중 67.2%가 업종유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증가 추세와 특히, 남동공단 내의 전통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 선진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비교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2004. 6.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적지 않은 ‘업종유지’ 계획업체들이 기업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보, 기술개발 지원’등의 측면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업종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자체개발도 있으나, 중소 제조업의 여건상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원청업체와의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외부기관 또는 업체와의 공동협력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산

비용절감, 판매시장확보, 종업원 교육강화가 특히 업종유지 계획업체에게 요구되고 있다.

□ 업종전환·공장이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업종전환, 공장이전’업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업종전환 비중이 전체 제조업체수의 7.8%, 공장이전 비중이 14.9%나 각각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내수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기술경쟁력 약화, 업종사양화’ 등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업종전환, 공장이전’업체 비중이 확대되어 지역 내 중소 제조업의 기반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내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의 재생을 위한 대책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 유지 전망이 불투명한 일부 사양산업을 제외하고 ‘판매시장 확보 지원’,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들 업체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내지는 ‘신산업과의 연계·육성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이전’ - 특히 중국이전 - 업체들은 특히 ‘인건비 등 비용절감, 현지판매시장 개척, 소비시장 접근성’ 등의 이전요인을 감안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 해외정보제공을 통한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이러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중복업무 분석 및 효율성 재평가 작업에 기초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종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인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도 대안으로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중소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 내 성장·고용을 제고시키는 중소 제조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표 5-1>에 요약된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는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관련기관들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역량에 따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 집행기관의 역량 여건을 고려한 자체적인 우선순위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종유지 계획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방안, 업종전환·공장이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동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강두용. 「탈공업화가 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3.
- 김광희·박장혁·박종영. 「소기업정책의 틀과 소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998.
- 김번욱.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인천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1998
- 김번욱. 「인천지역 제조업의 구조변화 배경 및 대응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2.
- 김번욱.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역할 제공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 김번욱·황중호. 「인천산업의 재생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 김대식. 「중소기업 지원금융 제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1995.
- 김선기·박희정.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 김선기·권오혁.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11.
-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8대 과제」, 2002.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Issue Paper』, 2004.
-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 활로모색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2003.
- 삼성경제연구소.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CEO Information』, 2000.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제조기업 부활의 교훈」, 『CEO Information』, 2003.
- 삼성경제연구소. 「제조기술 기반의 원가경쟁력 강화방안」, 『CEO Information』, 2003.
- 서건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소기업 발전 전략」, 중소기업연구원, 1998.
- 신창호. 「기업·대학·연구소간 하이테크 네트워크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양현봉. 「중소기업 구조전환과 정책 시사점 : 외환위기 전후의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2002.
- 양현봉. 「지역혁신 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2004.
- 이상철·복득규. 「인천지역 주요 제조업 클러스터기반 발전전략」, 인천발전연구원, 2002.
- 이윤보·최동규. 「일본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책」, 중소기업연구원, 1998.
-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인천산업진흥5개년 계획」, 인천, 1999.

인천광역시. 「인천미래발전계획」, 2002.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의 희망 중소기업. 우리가 돕겠습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길라잡이」, 2004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재발전(하)」, 인천 2001.

재정경제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안」, 경제장관간담회 회의자료, 2001.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 2004.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과학기술부. 「도전과 혁신의 길: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
략」, 2002.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200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LG경제연구원. 「세계 초우량 중소기업의 성공비결」, 『LG주간경제』, 1997.

LG경제연구원. 「제조업공동화와 기업전략」, 『CEO Report』, 2002.

LG경제연구원. 「산업공동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EO Report』, 2003.

LG경제연구원.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LG주간경제』, 1996.

LG경제연구원. 「제조업 진화의 숨은 코드」, 『LG 주간경제』, 2001.

LG경제연구원. 「선진사례로 본 제조업 진화 방향」, 『LG 주간경제』, 2001.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2000년도 지역내 총생산」, 2002

하병기·오준병. 「한국경제의 탈공업화 현황과 평가」, 산업연구원, 2003.

한국은행. 「인천지역 산업구조와 특화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천지점, 2002.

인터넷자료. <http://kosis.nso.go.kr>

인천지역 제조업의 재생을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중소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전통 제조업 부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역소재 제조업체들의 경영실태와 향후 사업계획(이전, 업종전환 등)조사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이어 5월 중에는 인천지역 기업재생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제조업 재생을 위한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각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의 정책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토론회 일정은 추후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귀사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이인석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정명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동석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전의진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권이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장 이승우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최문식

☞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처 ☜

♣ 조사주관기관 : 인천발전연구원(지역경제연구실)

♣ 조사수행기관 및 회신처

-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 032-260-2671) FAX 032-260-2788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총괄지원과 (☎ 032-450-1113) FAX 032-818-7469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 032-810-2833) FAX 032-818-2806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업지원부 (☎ 032-245-2000) FAX 032-245-2017
-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관리본부 (☎ 032-260-0210) FAX 032-260-0200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 입주지원팀 (☎ 032-810-9341) FAX 032-810-2510
-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사무국 (☎ 032-812-4347) FAX 032-812-4348

인천지역 기업의 재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표

1. 회사개요(2003년 12월말 기준)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매 출 액	억 원	종업원수	명		
			사무직	생 산 직	기 타
주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
주요생산품		1)	2)		3)
응답자	성 명	부서및직책		전화번호	
	주 소	(BL LT)	e-mail	FAX	

2. 귀사의 본사 및 공장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 ① 본사와 공장 모두 인천에 소재 ② 본사는 타 지역에 소재
 ③ 본사는 인천에, 공장은 타 지역에 소재 ④ 기타(기입:)

■ 내부 경영현황

<생산>

3-1. 귀사의 생산품은 다음중 어느 형태에 속합니까?

- ① 부품 또는 중간재생산 ②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③ 완제품(일괄) 생산 ④ 기타(기입:)

3-2. 귀사의 가동률(정상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은 어떠하십니까?

매우 낮음(50% 이하) ← 보통임(80~90%) ← 매우 높음(100%)
 ① ② ③ ④ ⑤

3-3. 귀사 가동률의 최근 3년간 추세는 어떠하십니까?

하락 ← 정 체 → 상승
 ① ② ③

<판매시장>

4-1. 귀사의 생산품은 내수용입니까? 수출용입니까?

전량 내수 시장 ← 수출비중(50%) ← 전량 수출용
 ① ② ③ ④ ⑤

<인력>

5-1. 귀사 종업원의 구성원 비중은 어떻습니까?

- ① 단순 생산직(%) ② 사무직(%)
③ 고급 기술·연구인력(%) ④ 기타(%)

5-2. 귀사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높은 이직율(타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
② 신규채용의 어려움(구인난, 채용인력 정보부족 등)
③ 인력(전문인력, 단순인력, 외국인근로자) 부족
④ 기타(기입:)

<연구개발>

6-1. 최근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즉,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귀사는 이러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강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6-2. 귀사의 연구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① 자체 개발 ② 외부 연구기관(대학포함)과의 협력
③ 원청업체와의 협력 ④ 기술이전 등 특허권 매입 등 ⑤ 기타(기입:)

6-3. 귀사가 기술(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기술인력 확보곤란 ② 기술개발비 조달곤란 ③ 개발부서(연구소) 운영능력 부족
④ 기술개발 성과 불확실성 ⑤ 신기술 정보 부족 ⑥ 개발기술의 사업화여력 부족
⑦ 연구장비 구입능력 부족 ⑧ 기술개발까지 장기간 소요 ⑨ 기타(기입:)

<자금조달>

7-1. 귀사의 자금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① 은행 등 1차 금융권 차입(주거래은행:) ② 비제도권 금융권 차입
③ 자기 자본 확충(증자) ④ 대표이사의 개인자금 등 ⑤ 기타(기입:)

7-2. 귀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을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금지원 정보부족 ② 정책자금 용도제한 ③ 대출금리·부대비용 과다
④ 대출절차 복잡 ⑤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 ⑥ 투자자 유치 곤란
⑦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 ⑧ 판매부진 ⑨ 기타(기입:)

7-3. 귀사가 최근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원자재가격 상승 | ② 인건비 상승 | ③ 신규설비투자 확대 |
| ④ 환경비용 증가 | ⑤ 기술개발비 증가 | ⑥ 재고비용 증가 |
| ⑦ 물류(유통)비용 증가 | ⑧ 마케팅비용 증가 | ⑨ 기타(기입:) |

■ 인천의 기업환경

8. 인천의 기업환경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대학, 연구소 등 기술개발 지원기관의 부족 | ② 고급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
| ③ 현장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 | ④ 판로 확보의 어려움 |
| ⑤ 기업지원서비스(마케팅, 컨설팅, 법률, 회계 등) 부족 | ⑥ 자금 조달의 어려움 |
| ⑦ 높은 분양가, 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 입지문제 | ⑧ 기타() |

9. 인천지역의 현재 기업환경에 대한 세부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1(어려움/미비)에서 7(용이/우수)사이의 값을 선택해 주십시오.

어려움(불리) ← → 용이(유리)

9-1. 우수한 물류인프라로 물류비 절감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2. 관련 산업·업체집적 대한 접근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려움(높음) ← → 용이(저렴)

9-3. 지가(地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4. 인천지역 지원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 → 용이

1) 시장개척 정보획득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입주지역 조성 및 관련 서비스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산학연 연계 등 혁신지원체제에의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산서비스인프라(금융, 호텔, 통신 등)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5. 인천시의 정책지원은 어떻습니까?

미흡 ← → 우수

1) 일반행정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세제 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6. 인천시의 규제 정도는?

	심함 ←						→ 약함
1) 환경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준조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수도권 규제 정책 (공장총량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7. 인천지역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미비 ←						→ 우수
1) 주거환경(녹지공간, 문화시설 풍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연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교육 · 훈련기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8. 항만물류와 관련, 활용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인천항 ② 부산항 ③ 평택항 ④ 기타 ⑤ 활용안함(육상물류활용)

9-9. 항만물류와 관련, 인천항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접근의 용이성 ② 저렴한 항만 이용료 ③ 수 · 출입 경로의 다양성
④ 기타(기입 : _____)

■ 향후 경영전략

10. 귀사의 향후 경영전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업종유지(선택시 '10-1'로 이동) ② 업종전환(선택시 '10-3'으로 이동)
③ 공장이전(선택시 '10-5'로 이동) ④ 기타(기입: _____)

<업종 유지>

10-1. 현 업종을 유지할 경우,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기술 경쟁력 확보 ②생산비용 절감
③판매시장(내수/수출) 확보 ④종업원 교육 강화
⑤자금 확보 ⑥기타(기입: _____)

10-2. 기술경쟁력 확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자체개발 ②지역대학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③원청업체와의 공동개발 ④기술이전 등 구매 ⑤기타(기입: _____)

■ 기업 경영관련 요망사항

11-1. 귀사의 **제품판매(내수)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②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③공동판매지원센터 설립
④제품 전시장 확대 ⑤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⑥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⑦품질인증지원 확대 ⑧동업종간 공동브랜드개발 지원 ⑨별로 없음 ⑩기타(기입:)

11-2. 귀사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해외 바이어·시장정보 확대제공 ②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③보조금 지원 확대
④국제특허·해외인증 획득 지원 ⑤수출업무 대행 ⑥원자재가격 안정화
⑦대기업과의 동반해외진출 활성화 ⑧수출금융 확대 ⑨수출기업화·제품화지원 확대
⑩해외제휴·협력업체 알선 ⑪별로 없음 ⑫기타(기입:)

11-3. 귀사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임금보조금 지원 ②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확대 ③근로환경 개선 지원
④인턴사원제 확대 ⑤산업연수생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⑥취업알선·정보제공
⑦생산설비 자동화 지원 ⑧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⑨별로 없음 ⑩기타(기입:)

11-4. 귀사의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 ②기술개발비 지원 ③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④신기술 D/B 구축 및 지원기술이전알선센터 운영 ⑤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⑥기술의 상업성 평가 ⑦연구장비 확보 지원 ⑧동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⑨시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⑩별로 없음 ⑪기타(기입:)

11-5. 귀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자금지원 홍보확대 ②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③대출금리 인하
④대출조건 완화 ⑤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 ⑥대출절차 간소화
⑦투자알선 ⑧정책자금지원 확대 ⑨별로 없음 ⑩기타(기입:)

11-6. 귀사의 **원가상승**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원자재가격 안정화 | ②임금보조금 지원 | ③설비투자자금 지원확대 |
| ④환경관련 규제 완화 | ⑤기술개발비 지원확대 | ⑥물류(유통)지원시설 확충 |
| ⑦판로지원 강화 | ⑧별로 없음 | ⑨기타(기입:) |

11-7. 귀사의 **공장(사업장)입지 환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생산 인프라 확대 | ②환경관련 규제 완화 | ③물류·유통인프라 확대 |
| ④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 ⑤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확대 운영 | |
| ⑥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 ⑦정보화 인프라 구축 | ⑧ 입지관련 제도 완화 |
| ⑨별로 없음 | ⑩기타(기입:) | |

■ 결론 : 인천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내부 역량 강화방안>

12. 현재 내수시장 침체와 산업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역내 중소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서, 귀사에서는 현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기업)

- | | |
|--------------------|-----------------|
| ①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 ②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
| ③제품의 수출확대 | ④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
| ⑤기술응용으로 신산업 창출 | |
| ⑥비용의 최대 절감 | ⑦제품의 마케팅 강화 |
| ⑧극복방법 없음 | |
| ⑨기타(기입:) | |

13. 특히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관 협력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인천광역시)

- | |
|--------------------------------|
| ①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중계 |
| ②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기업·대학·연구소에 대한 방향제시 |
| ③기업의 산·학·연 컨소시움 참여 지원 및 유도 |
| ④송도 테크노파크 앵커시설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 ⑤기타(기입:) |

<기업환경 개선방안(주체: 인천광역시, 지원기관)>

14.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십시오.

- | | |
|--------------------------|-------------|
| ①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 ②유통판내망 지원 |
| ③종업원의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④전자상거래 지원 |
| ⑤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 ⑥신기술 융합화 지원 |
| ⑦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⑧자금조달 지원 |
| ⑨행정절차 및 규제 완화 | ⑩기타(기입:) |

15. 다음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인천시 및 유관 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필요성**을 각 항목별로 1(불필요)에서 7(필요)사이의 값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불필요 ←————→ 필요						
1) 기업컨설팅서비스(경영, 마케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보지원서비스(DB, 정책현황, 산업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력중개서비스(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포럼, 세미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산업 창출 및 육성방안>

19. 정보통신 관련 업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
기되는 아래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2가지 이내로 체크(V)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주체: 인천광역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 | |
|-----------------------|-------------------|
| ①전자·정보기기 부품업체 기술지원강화 | ②기술개발관련 교육훈련과정 개설 |
| ③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유치 및 연계강화 | ④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확보 |
| ⑤멀티미디어 기술지원 센터 설립 | ⑥기타(기입:) |

■ 기타(건의 또는 애로사항 등)

20. 인천광역시나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	--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천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

IDI연구보고서 2004-08

인천 중소기업의 재생방안

발행인 이 인 석
발행일 2004년 9월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전화: 032-260-2600
팩스: 032-260-2788
<http://www.idi.re.kr>

[인쇄] 진원출판인쇄 TEL 032-467-4544~5

ISBN 89-5678-065-X 933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